

동북아 역사 포커스

NORTHEAST
ASIAN
HISTORY
FOCUS

제6호 | 2023 가을

포커스 **관동대지진 100년,
조선인 학살 은폐와
진상규명의 역사**

동북아역사포커스 제6호 (2023 가을)

Northeast Asian History Focus(Vol. 6 Fall 2023)

동북아역사포커스

제6호 2023 가을

발행일 2023년 9월 1일
등록번호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발행인 이영호
발행처 동북아역사재단
편집위원장 김현철
편집위원 김종근, 위가야, 이동욱, 조건, 조윤수, 차재복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전화 02)2012-6044
팩스 02)2012-6186
구독 문의 및 독자 의견 nahfocus@nahf.or.kr
제작·인쇄 역사공간

ISSN 2950-9696

『동북아역사포커스』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www.nahf.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록된 글은 필자의 견해이며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자의 글 김현철 동북아역사포커스 편집위원장	5
특별기고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과 한국 정부의 역할	8
	김광열 관운대학교 국제학부 명예교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과 현황	19
	다나카 마사타카(田中正敬) 센슈대학(專修大學) 문학부 교수	
포커스 관동대지진 100년, 조선인 학살 은폐와 진상규명의 역사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관련 연구현황과 과제	31
	장세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	
	유언비어와 계엄령하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은폐와 책임 회피	44
	서종진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장	
	1920년대, 관동대지진 전후 두 번의 조선인 학살: 식민주의와 예견된 비극	59
	배영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위원	
	전후 일본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기억과 ‘책임’의 서사	71
	황익구 동아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한일 시민의 노력과 과제	83
	성주현 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아연구소 연구교수	
체험! 역사현장	관동대지진 조선인 피해, 기억과 추모의 현장을 걸으며	96
	조건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현지통신	관동대지진 100년, 행정 당국에 의한 ‘역사 봉인’을 둘러싼 공방	109
	호리야마 아키코(堀山明子)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외신부 기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23년 9월 1일 일본 도쿄 등 간토(關東)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엄청난 자연재해로 인한 충격과 혼란의 와중에서 당시 간토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과 중국인, 또는 일부 일본인들이 학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인 학살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였으며, 어떻게 무참하게 죽어갔는지에 대해 1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자세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제6호에서는 ‘관동대지진 100년, 조선인 학살 은폐와 진상규명의 역사’를 주제로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으며, 지난 100년 동안 학살된 피해자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추모해 왔는가, 그리고 은폐된 역사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일 양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특별기고」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 돌아켜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 양국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광열 광운대학교 명예교수는 1923년 9월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일본 정부 앞으로 문서를 보내 이 사건에 대해 항의했던 사실과 1945년 해방 직후부터 1990년대까지 학살 희생자에 대해 몇 차례 추도행사가 치러졌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다나카 마사타카(田中正敬) 일본 센슈대학 교수는 1923년 관동대지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본 정부가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조선인 학살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2003년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제출한 진상규명 요청 권고안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커스」에서는 1923년 조선인 학살이 일어난 배경과 참혹한 현장, 그리고 이를 숨기고 그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해 온 일련의 과정을 관

런 전문가들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세운 성균관대학교 수석 연구원은 조선인 학살에 대해 그동안 한국과 일본에서 조사·연구한 현황과 피살자 명부 등 관련 자료를 소개하면서 일본 내 일부 과장, 왜곡된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장세운 연구원은 조선인 학살에 대해 은폐되고 왜곡된 인식과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조선인 학살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종진 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장은 관동대지진 이후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유언비어 유포로 불안과 공포감에 휩싸인 일본의 민간인들이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인과 일부 일본인을 학살하는 데 가담함으로써 차별과 편견에 기인한 학살 피해자가 한국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배영미 독립기념관 연구위원은 1920년대 일본에서 조선인이 학살된 사건으로 1923년 관동대지진뿐만 아니라 그 전후에 일어난 1922년 니가타현, 그리고 1926년 미에현에서 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본 민간인들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들을 비교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의 학살 모두 당시 조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 확산하였으며, 일본 경찰과 행정 당국이 유언비어 확산과 학살을 방조 내지 주도함으로써 일본의 폭력적인 식민 지배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 황익구 동아대학교 교수는 전후 일본에서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을 기억하고 책임 문제를 다룬 문학작품을 소개하면서, 학살에 가담했던 일본 민중들의 자기 반성과 군대, 경찰과 같은 국가 권력에 책임을 추궁하는 모습을 담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주현 청암대학교 연구교수는 관동대지진 직후부터 시작되어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 추모행사, 강연회, 현장답사에 이르는 학살된 조선인에 대한 진상 조사와 규명 노력의 과

정을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성주현 교수는 현재까지 과제로 남아 있는 조선인 학살의 진상규명을 위해 한일 양국 시민들이 함께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체험! 역사현장」에서는 조건 재단 연구위원이 관동대학살 당시 희생된 조선인들의 흔적을 찾아서 최근 일본 도쿄와 지바현 내 피해 장소와 추도비를 조사한 이야기와 잊혀진 학살 현장의 흔적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통신」에서는 호리야마 아키코(堀山明子) 일본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기자가 관동대지진 100년이 지난 현재 일본 내에서 조선인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도하기 위한 행사에 일본 정부와 도쿄도 등 행정 당국이 외면하며 보고서의 사실 인정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호리야마 기자는 당시 유언비어에 속아 조선인 학살에 가담했던 민중의 폭력적인 행동이 과거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일본 내 인터넷상의 허위 정보와 차별적 발언 등에 끌려서 재일한국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 등 차별적 발언과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 실린 글들이 독자들께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들이 겪은 상황과 학살당하게 된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감추어진 진실과 피해 상황을 밝힐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추도 등 향후 과제가 한일 양국 간 협의와 조사 연구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 노력을 통해 진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동북아역사포커스 편집위원장

김현철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과 한국 정부의 역할

김광열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명예교수

1. 들어가며

지금부터 100년 전,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일본의 수도권에 해당하는 간토(關東) 지방에서 매그니튜드 7.9 규모에 해당하는 거대 지진이 발생했다. 이른바 관동대지진이다.

대지진 직후에 일본 정부의 내무성 사회국이 발간한 『대정진재지(大正震災志)』에 의하면, 이 대지진으로 인해 도쿄(東京)시의 48만 3,000세대 중에서 30만 924세대가 완전히 불탔으며, 인명 피해도 사망자 9만 1,344명, 행방불명자 1만 3,275명, 중경상자 5만 2,084명에 이를 정도로 막심했다. 또한 대지진에 의한 충격으로 전기, 수도, 도로, 철도 등의 라이프 라인(life line)이 파괴되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1923년 9월 일본의 관동대지진은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대규모 자연재해였다.

특별기고

그런데 이 대지진 직후에 잔혹한 인재(人災)가 일어났다. 대지진이 발생한 지역에 퍼진 “조선인들이 방화, 폭동, 약탈”을 한다는 허황한 유언비어를 군대와 경찰 및 민간 자경단이 당연한 듯이 믿고, 구직이나 학업을 위해 간토 지방에 이주해 있던 조선인 6,000여 명을 학살한 사건이다(이하 ‘관동대학살사건’).

이 관동대학살사건이 일어난 경위를 살펴보면 일본 정부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학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거나 반성을 표명한 적이 없다. 1945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일본 국회(중의원, 참의원)에서 실시한 당해 주제에 관한 대정부질의에서 일본의 수상이나 정부 당국은 “정부 내에 관련 기록이 없으므로 답할 수 없다”는 무책임하고 모순적인 답변을 할 뿐이었다.

이 글에서는 1923년 9월의 관동대학살사건에 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검토하고, 일제 강점에서 해방된 1945년 8월 이후 한국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한국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제언하고자 한다.

2.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사건과 일본 정부의 책임

(1) 경찰에 의한 유언비어

일본 수도 도쿄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시청(警視廳)이 1925년에 간행한 『대정대진화재지(大正大震災災誌)』에 의하면, “후지산(富士山)에 대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도쿄만(東京灣) 연안에 큰 해일이 올 것이다”, “대지진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등과 같은 유언비어가 “유포된 것은 9월 1일 오후 1시경”이었다고 하였고, 오후 3시경에는 “사회주의자 및 조선인의 방화가

특별기고

많다”는 유언비어가, 또한 9월 2일 오전 10시경에 “불령선인(不逞鮮人)이 습격할 것이다”, “어제의 화재 대부분은 불령선인이 방화하거나 폭탄 투척에 의한 것이다”라는 유언비어가 퍼졌다고 한다. 단 그 유언비어의 출처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조선인 폭동에 대해 걱정하던 민중이 그 실현에 대해 직감적으로 두려워해서 그랬다는 말도 있다”고 했다. 즉 경시청은 유언비어가 발생한 책임을 일반 민중에게 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23년 9월 관동대지진 당시의 실상을 취재한 신문이나 경험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다름 아닌 일본 경찰 스스로가 유언비어를 퍼트렸다는 것이 확인된다. 대지진 직후의 ‘보도 금지’ 조치가 풀리자 『호치신문(報知新聞)』 1923년 10월 22일 자 석간에서 대지진 당시 경찰의 대응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당시 경시청 및 각 경찰이 그 헛소문에 허둥지둥하여 큰 소동을 연출한 것도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사실 2일 밤부터 3일 오후에 걸쳐 아사쿠사(淺草), 스가모(巢鴨), 요도바시(淀橋) 방면에서는 오토바이를 탄 경관과 재향군인이 “조선인이 쳐들어오니 여자와 어린이는 안전지대로 피난시키고, 장정들은 …”이라고 외치며 돌아다녀서 인심의 불안을 극에 달하게 하였다. 경시청에서도 2일 밤에는 조선인 폭동을 완전히 사실로 믿은 것 같다.

또한 나카하라무라[中原村: 현 가와사키(川崎)시]의 청년단 및 재향군인회 회원이었던 고바야시 히데오(小林英男)는 9월 2일 자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¹

금일 오후 경찰로부터 “게이힌(京浜) 방면의 조선인 폭동에 대비하기 위해 출동하

라”는 통달이 왔다. 재향군인, 청년단, 소방단 등 마을에서 혈기왕성한 남자들은 각자 무기를 들고 모여서 이치노다이(市之坪)의 경계까지 진군하였다.

(2) 내무성에 의한 유언비어와 그 악영향

9월 2일, 일본제국 정부는 도쿄시와 주변 5개 군에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해당 지역에 군대 출동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일본 경찰 최상위 부서인 내무성 경보국(警保局)의 고토 후미오(後藤文夫) 국장은 “조선인들의 폭동”이라는 소문과 계엄령 선포를 알리는 내용의 전문을 기마 전령에게 휴대시켜 지바(千葉)현 후나바시(船橋)의 해군 무선전신 송신소로 보냈다. 경보국장의 전문은 다음 날 오전 8시 15분 구레(呉) 해군 진수부(鎮守府) 무선소를 경유하여 일본 전국 도부현(道府縣)의 지방행정 책임자 앞으로 송신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²

1 川崎市役所 編, 1968, 『川崎市史』; 山田昭次, 2011,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とその後-虐殺の國家責任と民衆責任-』, 創史社.

2 琴秉洞 編・解説, 1991, 『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問題關係史料-朝鮮人虐殺關係官廳史料』, 綠蔭書房.

도쿄 부근에 진재를 틈타서 조선인이 각지에서 방화하고 불령한 목적을 수행하고, 실제로 도쿄 시내에서 폭탄을 소지하고 석유를 부어 방화하는 자들이 있다. 이미 도쿄부의 일부에는 계엄령을 시행하고 있으니, 각지에서도 충분히 주도면밀한 시찰을 하고 조선인의 행동에 대해 엄밀하게 단속하도록 하라.

특별기고

내무성 당국이 대지진 발생 직후에 퍼진 조선인 관련 유언비어를 진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계엄령 선포 사실과 함께 군용 전신망으로 일본 전국의 행정기관에게 하달하면서 그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지시한 것이다.

즉 일본제국의 경찰 행정을 총괄하는 내무성 당국이 대지진 발생 직후에 퍼진 조선인 관련 유언비어를 진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계엄령 선포 사실과 함께 군용 전신망으로 일본 전국의 행정기관에게 하달하면서 그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지시한 것이다.

그럼 사이타마(埼玉)현의 사례를 통해, 당시 그 경보국장의 지시를 지방행정기관이 실제로 어떻게 수행했는지 보도록 하자. 사이타마현의 내무 부장은 9월 2일 오후 5시에 내무성 회의에 참석하고 귀청한 지방과장의 보고를 듣고, 산하의 군정촌(郡町村)에 전화나 전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시하였다.³

이번 진재 시에 도쿄에서 불령선인의 망동이 있었고 ... 이참에 정촌(町村)의 당국자는 재향군인회, 소방대, 청년단 등을 일치 협력시켜 그 경계에 임하게 하여, 유사 시에는 신속히 적당한 방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매우 급하게 수배를 해주시기 바람.

즉 1923년 9월 2일 당시 사이타마현 당국은 내무성 경보국으로부터 들었던 조선인들에 대한 유언비어를 기정사실로 판단하고 산하의 행정기관에게 자경단 구성과 ‘경계’ 지시를 했던 것이다. 특

3 吉野作造, 1924, 『朝鮮人虐殺事件』, 『壓迫と虐殺』

히 산하기관에 대한 지시 중에서 “유사시”에 “신속히 적당한 방책을 강구”하라고 한 것은 각지의 자경단에게 조선인들을 발견할 시에는 현장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간토 지방의 다른 현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 결과로서 동년 9월 2일부터 도쿄부, 가나가와(神奈川)현, 지바현, 사이타마현, 군마(群馬)현 등 각지에서 군대나 경찰 또는 민간 자경단에 의한 조선인학살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1923년 9월 2~3일에 군사용 무선을 통해 일본 전국의 행정기관에 유언비어를 전달하여 대학살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 정부 내무성의 책임은 명백하고 지대하다.

3. 해방 후 한국에서 실시된 관동대학살사건 희생자 추도행사

(1) 해방 직후부터 1990년대까지의 추도행사

그럼 식민지 강점에서 해방된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관동대학살사건을 어떻게 기억했을까. 1946년 9월 2일 오후 2시, 서울의 종로 YMCA 강당에서 재일본조선인연맹 서울위원회와 반일운동자구호회가 ‘일본 관동대지진 피학살 동포 추도회’를 개최하였다.⁴ 이는 해방된 한반도에서 처

4 『현대일보』 1946. 8. 31.

5 『동아일보』 1946. 9. 3.

6 「간토대학살 59주기 각 종교단체 위령제」, 『동아일보』 1982. 8. 27.

특별기고

음 개최된 관동대학살사건의 희생자를 기리는 추도행사였다. 그날의 추도식은 재일조선인연맹 조직부장이었던 배철(裴哲)이 사회를,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변호사 허헌(許憲)이 개회사를 낭독했다.⁵ 즉 해방 이전 일본에 거주했던 한민족의 애환을 기억할 수 있던 시기였기에 재일동포 단체의 주도로 관동대학살사건 희생자 추도식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그 후 36년 동안 한국에서는 관동대학살사건 희생자의 추도식을 볼 수 없었다. 그러다가 1982년 9월에 돌연 관동대학살사건 피해자를 추도하는 대규모 행사가 개최되었다. 1982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부터 정오까지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천도교본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등 4개 교단 산하의 종교단체에서 관동대학살사건 피해 한국인을 추도하는 위령제가 개최되었으며, 같은 날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독립운동유공자협회가 추념 강연회를 개최하였다.⁶

그런데 해방 직후인 1946년 9월에 재일조선인연맹의 추도식이 있던 후 36년 동안 개최되지 않던 관동대학살사건 희생자 추도행사가 왜 1982년 9월에 대대적으로 개최되었을까. 그 이유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암살사건 이후 새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의 대일 강경외교에 있었다. 전두환 정권은 집권 직후부터 종래의 한일 관계를 종속적이라고 비판하며, ‘한반도 안보’가 일본의 안보와 직결된다는 명분으로 일본 정부에게 60억 달러의 경제 차관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와 같은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요구에 냉담했는데, 그 와중인 1982년 7월에 이른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건’(1차)이 일어났다. 일본 문부성의 검정을 통과한 역사교과서에 1930년대 일본제국의 주변국 침략 행위를 ‘진출’이라는 용어로 호도한 기술을 실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그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을 차관 도입 성사의 기

특별기고

1982년 9월에 개최된 그 추도행사는 한국 사회에서 관동대학살사건이 기억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국내에서 고조된 반일 캠페인으로 인해 역사 속에서 우연히 호출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회로 삼고, 대대적으로 반일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국내 언론사들도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한국인의 피해를 강조하는 기사를 연재하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해방 이후 36년 동안 잊혔던 관동대학살사건 희생자의 추도행사가 개최되었던 것이다.⁷ 즉 1982년 9월에 개최된 그 추도행사는 한국 사회에서 관동대학살사건이 기억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국내에서 고조된 반일 캠페인으로 인해 역사 속에서 우연히 호출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듯이, 그 후 한국 사회에서는 2000년대 초까지 관동대학살사건과 관련된 추도행사를 전혀 볼 수 없었다.

(2) 2000년대 접어들며 활기를 띤 추도행사

그런데 2000년대 초에 그 공백이 깨졌다. 2007년 9월 3일, 한국의 대안교육단체인 아힘나운동본부가 일본 시민단체 아시아하우스와 함께 국회의원 회관에서 ‘간토대진재 84주기 재일조선인 학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행사’(유기홍 의원 주관)라는 추도행사를 학술 심포지엄과 같이 개최하였다(김종수 목사의 인터뷰). 아힘나운동본부의 리더인 김종수 목사는 관동대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상정하고 있었는데,⁸ 그것은 당시 국내에서 각종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이

7 「논단: 간토지진 대학살 59년만에 위령제, '왜곡'으로 되살린 망각 속의 일제 만행」, 『동아일보』, 1982. 8. 24.

8 『세계일보』, 2008. 9. 8.

특별기고

전개되던 상황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 후 아힘나운동본부에서 발전한 ‘1923한일재일시민연대’(이하 ‘1923시민연대’)가 추도행사를 주최하였으며, 2013년에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을 국회 제출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이 특별법안은 국회 본회의까지 상정되지 못했고, 결국 2015년에 회기 종료와 함께 효력을 상실했다.

2016년에는 ‘1923년 학살당한 재일 한인을 추도하는 모임’(이하 ‘추도하는 모임’)이란 단체가 신설되어 독자적인 추도식을 개최했다. 이 단체는 8월 20일 광화문광장에서 기독교, 불교, 천도교 등 3개 종교단체 연합추도식을 가진 다음, 일반 시민들의 참여하에 관동대학살 희생자를 위령하는 냇전춤, 상여모심 등의 전통행사를 개최했다. 그들의 의도는 당시 일본 각지에서 재일코리안을 배척하는 배외주의 데모가 고조되던 상황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였다. 단 2018년에는 ‘1923시민연대’와 ‘추도하는 모임’이 같이 추도식을 개최하기로 하여, 8월 30일에 서울시청 시민홀에서 합동추도식이 개최되었다. 그 연장선에서 2022년 7월 12일에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50여 시민사회단체 및 학술단체가 참여하여 간토학살 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이하 ‘100주기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2023년 3월 8일에는 ‘관동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이 10년 만에 다시 국회에 제출되었다. 관동대학살사건 100년을 맞이하여 관련 운동이 큰 결실점을 이루게 것이다. 이는 2007년 이후 관련 시민단체들이 관동대학살사건 희생자의 추도행사를 꾸준히 전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관동대학살사건 100년 추도행사는 2023년 8월 28일에 ‘100주기추진위원회’에 의해 개최될 예정이다.

국내의 관동대학살 희생자 추도행사는 모두 민간단체가 주도한 것이다. 즉 대한민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동대지진 이후에 6,000여 명의 한민족이 학살당한 사건에 대해 애도를 표시하거나 진상규명을 언급한 적은 없었다.

4. 주목되는 한국 정부의 역할

1945년 8월 한반도가 식민지 강점에서 해방된 이후 1990년대까지 한국 사회에서 관동대학살사건 희생자를 추도하는 행사는 2회 밖에 없었다. 단, 2007년 이후에는 민간단체에 의한 추도행사가 꾸준히 전개되었다. 그 배경에는 당시 한국 사회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과거사 진상규명운동’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추도 활동이 지속된 결과, 2022년 7월에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한 ‘100주기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정리한 국내의 관동대학살 희생자 추도행사는 모두 민간단체가 주도한 것이다. 즉 대한민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동대지진 이후에 6,000여 명의 한민족이 학살당한 사건에 대해 애도를 표시하거나 진상규명을 언급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1923년 9월 관동대지진이 일어난 직후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 정부 앞으로 문서를 보내어 조선인학살사건에 대해 항의했던 사실을 상기할 필

9 「우리 임시정부에서 적 정부 항의 제출-재중(災中) 한인 학살에 대하여」, 『독립신문』 1923. 9. 19.

특별기고

요가 있다.⁹ 조국이 일제에게 침탈당하여 해외에서 매우 어렵게 유지되고 있던 임시정부조차 1923년 일본에서의 조선인학살사건을 인지한 직후 일본 정부에게 명확하게 항의하였다.

이제 세계 유수의 중견 국가가 된 한국 정부는 100년 전에 일어난 자민족 학살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역사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사안으로 비추어진다. 한국 정부가 다시는 그와 같은 비참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연한 태도를 표명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아직도 일본 거주 동포들이 큰 지진이 일어난 직후에 100년 전과 유사한 유언비어의 대상이 된다가거나, 배타주의적인 ‘헤이트 스피치’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옹호’는 물론이거니와 ‘재외국민 보호’라는 국민국가로서의 기본을 지키는 사안에 해당한다.



김광열(金廣烈, Kim, Gwang-yol)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명예교수

일본 히토쓰바시대학(一橋大學) 대학원 사회학연구과에서 사회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23년 2월에 정년퇴직한 후 근현대 동아시아 역사, 일본사회론 등의 강의를 이어가면서, 근현대 일본의 민족차별 문제 및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전쟁동원과 전후책임 문제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과 현황

다나카 마사타카(田中正敬) 센슈대학(專修大學) 문학부 교수

1. 머리말

1923년 9월 1일에 발생한 관동대지진 후에 군대와 경찰, 민간인 등에 의해 조선인, 중국인, 일본인 학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불령한 조선인이 습격한다’ 등의 유언비어가 발생한 것이다. 유언비어의 발생과 전파에는 반드시 사람과 조직이 개재되고 전달의 수단이 있다. 유언비어는 일본 전국, 한반도, 해외에까지 전파되었다. 유언비어의 확대에는 분명히 국가의 관여가 있었다. 일본 정부(이하 ‘정부’)는 무선전신과 전화 등을 이용해 조선인 폭동 관련 유언비어를 전달하고, 각 지역에 자경단을 조직하게 하였다. 마을에서는 경찰관이 주민들에게 주의하도록 알렸다. 정부가 유언비어를 흘려보낸 것은 유언비어를 보증하는 것이 된다. 이로 인해 유언비어의 신빙성이 증가했다.

당시 정부는 ‘조선인 폭동’에 대한 경계 태세를 갖췄다. 관동대지진 발생 다음 날인 9월 2일에 정부는 전시와 내란 등 비상시에 발령되는 계엄령을 시행하였으며, 치안을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했다. 계엄령 선포 목적의 하나는 조선인에 대한 경계와 소요 진압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탄을 지급받고 출동한 군대는 조선인을 학살하였다.

조선인학살사건에 대해서 일본 사회와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 오고 있는가. 정부의 인식을 중심으로 되돌아보고자 한다.

2.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진상규명

관동대지진 당시 학살당한 조선인의 이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도대체 몇 명의 조선인이 학살당하고 부상을 입었는가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부가 사건을 은폐했기 때문이다.

(1) 국가 범죄를 은폐한 일본 정부

관동대지진 당시 학살당한 조선인의 이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도대체 몇 명의 조선인이 학살당하고 부상을 입었는가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부가 사건을 은폐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언비어의 유포와 군대, 경찰 등이 일으킨 학살사건의 책임 추궁을 두려워하였다.

1923년 9월 5일, 정부는 회의에서 ‘극비, 조선인 문제에 대한 협정’을 결정하였다. 그 내용은 조선인이 일본인을 폭행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특별기고

는 것을 ‘사실’로 선전하는 것이었다.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그해 12월에 작성한 문서에는 조선인 희생자의 사체를 신속하게 화장하고 일본인인지 조선인인지 알지 못하도록 ‘처치(處置)’하라고 기록되어 있다. 정부는 유언비어를 사실이라고 정당화하고 학살의 은폐를 위해 사체를 숨긴 것이다.

학살사건의 책임 추궁도 철저하지 못했다. 일본 민중이 행한 학살에 관해서는 검거,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군대가 벌인 중국인·조선인 학살은 전혀 범죄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관동대지진 후의 제국의회에서도 정부가 유언비어 확산과 조선인 학살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1923년 12월 16일에 열린 제국의회에서 나가이 류타로(永井柳太郎) 의원이 이에 대해 추궁하자, 야마모토 곤베(山本權兵衛) 수상은 “정부는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현재까지 그 ‘조사’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중국인 희생자의 경우 중국 정부가 조사단을 파견하여 사건의 실태를 조사하고 희생자 명부 등을 작성하였는데, 많은 조선인 희생자 이름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조선에서도 엄격한 언론 통제가 실시되어 한반도에 귀향한 조선인에게 는 일본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았다. 또한 조선에서 발행한 민족지(紙)도 검열을 받고 때때로 기사를 압류당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국가 범죄 책임을 추궁받는 것을 두려워한 사실이 현재까지 피해 실태를 불명확하게 한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2)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정부가 사건을 은폐하는 가운데, 조선인 유학생들(재일본 관동지방 이재 조선동포 위문반)이 조사를 실시했다. 정부의 방해를 받으면서 진행된 조사의 중간보고는 상하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발행하는 『독립신문』(1923년 12월 5일 자)에 ‘본사 피학살 교일 동포 특파조사원 제1신’으로 발표되었다. 희생자 수는 6,661명(다시 산정하면 6,644명)이라고 보고되었다. 일본의 최근 연구에서는 희생자를 수천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1945년 해방 후, 관동대지진 학살사건에 관해서는 일찍부터 재일코리안들이 추도행사와 조사를 추진해 왔다. 1945년 12월 도쿄에서 개최된 박열(朴烈) 환영대회에서는 정부에 대해 관동대지진 학살의 진상을 공표하고 관계자를 엄벌에 처하라는 요구가 채택되었다. 1946년 9월 1일에는 도쿄에서 ‘관동대지진 학살 희생자 추도대회’가 개최되었다. 다음 날인 2일에는 서울에서도 ‘일본 관동대지진 피학살 동포 추도회’가 개최되었다.

1947년에는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체험기 등을 수록한 서적 『관동대지진 백색 테러의 진상』이 재일코리안에 의해 편찬되었고, 또 학살지역에 대한 조사도 실시되었다. 재일코리안이 주최하는 관동대지진 추도식은 현재까지 각지에서

전후, 재일조선인 연구자를 비롯한 연구자가 이 문제를 거론하고, 관련 문서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 그 결과, 도쿄와 가나가와현, 지바현, 사이타마현, 군마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학살의 실태와 군대, 경찰, 주민들의 사건 관여가 명확해졌다.

특별기고

실시되고 있다.

전후, 재일조선인 연구자를 비롯한 연구자가 이 문제를 거론하고, 관련 문서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살이 일어난 지역에서도 초중고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주민들로부터 증언 채록 등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도쿄(東京)와 가나가와(神奈川)현, 지바(千葉)현, 사이타마(埼玉)현, 군마(群馬)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학살의 실태와 군대, 경찰, 주민들의 사건 관여가 명확해졌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학살사건을 목격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재일코리안 문무선(文戊仙)이 제기한 인권 구제 신청에 근거하여 연구자의 협력을 얻어 사건을 조사했다. 그런 다음 2003년에 정부에 대해 두 가지 ‘권고’를 촉구하였다.

첫째, 국가는 관동대지진 직후 조선인, 중국인에 대한 학살사건에 관여하였다. 군대에 의한 학살 피해자와 유족, 그리고 허위 사실의 전달 등 국가 행위로부터 유발된 자경단에 의한 학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그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

둘째, 국가는 조선인, 중국인 학살의 전모와 진상을 조사하고 그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 권고는 일본 정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것이었는데, 정부는 이에 답하지 않고 있다. 정부기관 내에서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인정하는 견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내각부 중앙방재회의 ‘재해교훈의 계승에 관한 전문조사회’가 작성한 『1923 관동대진재 보고서(제2편)』(2009)은 조선인 학살에 관한 사료를 제시하면서 국가가 유언비어의 확산과 학살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의 공식 견해는 1923년 당시에 일본 정부가 조선인 학살에 관여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같은 정부 내에서 상반된 평가가 양립하는 것이다.

3. 학살에 관여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와 그 논리:

국회 질의를 중심으로

전후 국회에서도 조선인 학살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는 질의가 실시되었다. 예를 들어 1964년 제46회 국회에서는 3월 17일과 30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공산당 스도 고로(須藤五郎) 의원이 자신의 견문에 근거하여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외무대신과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수상에게 정부 책임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케다 수상은 민간인이 저지른 사건이 있었던 것은 인정했으나, ‘국가 전체’ 책임은 부정하였다. 국가가 조선인 학살에 관여한 것은 1923년 당시부터 현재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야당 의원이 ‘질문주의서’로 학살사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추궁하기도 하였다. ‘질문주의서’란 국회의원이 내각에게 질문하는 문서이다. 국회의원은 국회 개회 중이라면 누구라도 의장을 경유하여 내각에 질문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내각은 이에 답해야 한다. 다만 질문과 답변이 문서로 오가기 때문에 보통 질문 1회, 답변 1회로 질의가 끝난다. 대면 질의응답에서는 정부 답변에 대해 불복할 경우 그 자리에서 반복해서 질문할 수 있지만, 질문주의서로는 어렵다. 질문주의서 및 답변서 원문은 일본어이지만 국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야당은 지금까지 8회에 걸쳐서 정부 책임을 추궁해 왔는데, 그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특별기고

- ① 2015년 2월 18일 (가미모토 미에코(神本美恵子) 민주당 참의원 의원) 질문주의서에서는 야마모토 곤베 수상이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해 ‘현재 조사 진행 중’이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조사의 결과를 질문했다(답변은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
- ② 2016년 5월 27일 (다시로 가오루(田城郁) 민진당 참의원 의원) 질문주의서에서는 현 정부가 조선인, 중국인 학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관여를 현 정부는 인정하는지, 왜 일본변호사연합회의 권고서에 답하지 않았는지, 과거를 반성하는 입장에서 두 번 다시 인권 침해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지를 질문했다(답변은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
- ③ 2017년 4월 26일 (아리타 요시후(有田芳生) 민진당 참의원 의원) 질문주의서에서는 정부가 재해 교훈의 계승에 관한 전문조사회 『1923 관동대진재 보고서(제2편)』에 기술되어 있는 군대 등에 의한 학살을 인정하는지를 질문하고, 도쿄도(都) 공문서관(公文書館)에 소장된 군대에 의한 학살 기록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였다(답변은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
- ④ 2017년 11월 2일 (하쓰시카 아키히로(初鹿明博) 입헌민주당 중의원 의원) 질문주의서에서는 학살당한 조선인의 피해 현황과 피해자 수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답변은 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 아소 다로).
- ⑤ 2018년 4월 6일 (아리타 요시후 입헌민주당 참의원 의원) 질문주의서에서는 방위성에 소장된 군대에 의한 조선인 학살 기록의 존재, 그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학살 관련 사료의 조사를 요구하였다(답변은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
- ⑥ 2019년 2월 26일 (아리타 요시후 입헌민주당 참의원 의원) 질문주의서에서는 ⑤의 질문주의서에 대해 정부가 사료가 없다고 답변했으므로, 해당 사료의 청구번호까지 써서 사료와 그 내용에 대해 재질문했다(답변은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
- ⑦ 2022년 5월 26일 (아리타 요시후 입헌민주당 참의원 의원) 질문주의서에서는 국립국회

특별기고

도서관 행정자료실에 소장된 조선총독부 문서의 존재와 내용 확인을 요구하였다(답변은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이 문서에는 조선인 사체를 신속하게 화장하여 조선인인지 일본인인지 알지 못하도록 처치하고 있다는 기술이 있다.

- ⑧ 2022년 12월 6일 (스기오 히데야(杉尾秀哉) 입헌민주당 참의원 의원) 질문주의서에 서는 ⑦의 질문주의서에 대해 정부가 사료가 없다고 답변했으므로 재질문하였다(답변은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이에 대한 답변은 동일하게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다).

이들 질문에 대해 정부는 ‘조사한 범위에서는 정부 내에 기록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질의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곤란하다’며 언제나 동일한 답변을 하고 있다. 또, ③의 질문주의서에서 확인을 요구한 도쿄도 공문서관의 사료는 자료집에 수록되어 공간(公刊)되어 있는데, 정부는 이것도 ‘발견할 수 없다’고 답했다. 도쿄도 공문서관은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찾을 수 없다는 논리인 것 같다. ⑦, ⑧의 국회도서관 소장 사료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이다. 다만 ⑥의 질문주의서에서 방위성과 같은 정부 기관에 소장된 문서에 대해서 재질문한 결과, 겨우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였다. 그것도 정부는 이 문서가 ‘관동대지진 때 정부 내에서 작성한 문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기록이 없으므로 답할 수 없다고 하며 내용 확인을 거부하였다. ⑤에서 요구한 사료 조사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조사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며 거부했다.

그리고 ②의 질문주의서에서 가해의 역사에서 배우고 인권 침해를 반복하지 않도록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조선인 학살’이라는 구체적 지정을 피하고 인권 보호는 중요하다는 일반론의 취지로 답했다.

- ③의 질문주의서에서 내각부 중앙방재회의가 작성한 『1923 관동대진

질의 과정을 통해 정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선인 학살에 국가가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불성실한 답변일 뿐만 아니라 분명한 허위 답변이다. 이러한 답변을 하면서까지 일본 정부는 과거의 가해 사실로부터 도망치려 하고 있다.

재 보고서(제2편)』에 군대와 경찰의 조선인 학살에 대한 기술이 있는데, 이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정부는 해당 보고서는 ‘유식자(有識者)’가 집필한 것으로 기술 하나하나에 대해 답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변하였다. 이 회의의 회장은 총리대신이다. 그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은 회의 최고책임자라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무책임하다.

정부의 답변은 질문에 대해서 정면으로 답하지 못하고 ‘기록이 없다’고 하고, 내용에 대해서도 언제나 사실 확인을 피하고 있다. 문서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관동대지진 때 정부 내에서 작성한 문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어서 답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답변은 성청(省廳)의 공문서 관리체계가 영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떤 공문서라도 작성 기일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궤변에 대해서 2023년 입헌민주당 스기오 히데야 의원과 사회민주당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穂) 참의원 의원은 각각 내각위원회(5월 23일)와 외무위원회(6월 15일)에서 질의를 했다. 국회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료를 근거로 정부 견해에 대해 질의한 것은 1923년 12월의 제국의회 이래 100년 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이 위원회

특별기고

에서도 정부의 답변은 변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질의 과정을 통해 정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선인 학살에 국가가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불성실한 답변일 뿐만 아니라 분명한 허위 답변이다. 이러한 답변을 하면서까지 일본 정부는 과거의 가해 사실로부터 도망치려 하고 있다.

4. 맺음말

이상과 같이 일본 정부는 조선인 학살에 대한 정부의 관여에 관해서 언급을 피하는 것이 실상이다. 정부는 일련의 답변서에서 학살사건을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할 계획이 없음을 단언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희생자의 유족과 관계자에게 더욱 상처를 주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지방행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2017년 9월 26일 도쿄도 의회 본회의에서 조선인 학살 관련 인식에 대해서 질의를 받은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는 “무엇이 명백한 사실인가에 대해서는 역사가가 밝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며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 언급하고 논평하는 것을 피했다. 이 해부터 도쿄도지사는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행사에 추도사를 보내지 않고 있다. 1973년에 도쿄에 추도비가 건립된 이후 역대 도지사가 보내던 추도사를 그만둔 것이다. 역사교육 현장에서도 학살 사실을 지우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태도에 직면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먼저 할 일은 정부 스스로 학살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사료(정부가 작성한 공문서)에 학살 관련 기술이 ‘존재’함을 인정하게 하는

특별기고

것이 그 출발점이고, 그 다음에 자료의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답변을 보면, 정부가 방위성에 보존되어 있는 「공문비고(公文備考)」와 같은 사료에 대해서는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다음 과제이다.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정부의 답변은 조선인 학살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부의 불성실함과 무책임성을 잘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하다.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된다.

정부에게 가해의 역사를 인정하게 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증거는 없앨 수 없는 것이므로 정부가 학살의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것을 실마리로 하여 향후 일본 정부의 책임을 계속해서 묻고 싶다.



다나카 마사타카(田中正敬, Tanaka, Masataka)

센슈대학(專修大學) 문학부 교수

일본 히토쓰바시대학(一橋大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도쿄의 센슈대학 문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일관계사를 전공하고 식민지기 한국근현대사를 연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과 관련하여 그 실태의 규명과 함께 현재 일본 사회와의 관계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관동대지진 학살사건 연구자로서 『關東大震災と朝鮮人虐殺』(공저, 2016), 『地域に學ぶ關東大震災』(2012) 등 다수의 연구 성과가 있다.

포커스

관동대지진 100년, 조선인 학살 은폐와 진상규명의 역사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관련 연구현황과 과제

장세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

유언비어와 계엄령하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은폐와 책임 회피

서종진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장

1920년대, 관동대지진 전후 두 번의 조선인 학살: 식민주의와 예견된 비극

배영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위원

전후 일본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기억과 '책임'의 서사

황익구 동아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한일 시민의 노력과 과제

성주현 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아연구소 연구교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관련 연구현황과 과제

장세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

1. 조선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필요

일본 관동대지진 100년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다.

관동대지진은 1923년 9월 1일 일본 도쿄(東京) 등 간토(關東) 지방과 일부 시즈오카(靜岡)·야마나시(山梨) 지역에서 발생한 매그니튜드 7.9의 대규모 지진이였다. 이로 인해 사망자 10만 5,000여 명, 부상자 11만 5,000여 명의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진으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일본 내무성은 계엄령을 선포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혼란이 더욱 심해지자 일본 정부는 국민들의 불만을 재일조선인들과 일부 사회주의자들에게 돌리기 위하여 이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군경, 자경단(自警團) 등을 동원하여 무고한 조선인들을 대거 학살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관동대지진 때 피살된
조선인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지진 발생
직후부터 일본 당국과
조선총독부에서
강력한 언론 통제를
실시하여 진상의
전파를 철저히
차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관동대지진 때 학살된 조선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아직 그 진상을 규명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덕상(姜德相)과 야마다 쇼지(山田昭次), 금병동(琴秉洞) 등이 일찍이 관심을 갖고 자료 집과 전문적 단행본을 간행하였다. 특히 강덕상은 1990년대 말에 일련의 논문을 발표하여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강덕상의 조선인 학살 관련 저작은 한국에서도 번역 출간되어 재일조선인의 피해와 학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¹ 야마다의 책도 번역되어 이 문제에 대한 연구와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이바지하고 있다.²

1 강덕상, 2005, 『학살의 지역, 관동대지진』, 역사비평사.

2 야마다 쇼지 지음, 이진희 옮김, 2008,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 국가와 민중의 책임』, 논형.

3 이에 관해서는 山田昭次, 1979, 「關東大震災期朝鮮人暴動流言をめぐり地方新聞と民衆-中間報告として」, 『在日朝鮮人史研究』 5, 在日朝鮮人運動史研究會; 이연, 1992, 「관동대지진과 언론통제-조선인학살사건과 보도통제를 중심으로」, 『언론학보』 27 참조.

관동대지진 때 피살된 조선인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지진 발생 직후부터 일본 당국과 조선총독부에서 강력한 언론 통제를 실시하여 진상의 전파를 철저히 차단했기 때문이다.³ 그 와중에도 대한민국임시정부 기관지 상하이판(上海版) 『독립신문』은 1923년 9월 4일 맨 먼저 호위를 발행하여 관동대지진과 재일조선인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그 뒤에도 큰 관심을 갖고 최초로 조선인들의 피해를 체계적으로 조사, 보도했다. 『독립신문』은 이해 12월 5일 자(제167호)에서 모두 6,661명이 희생되었다고 밝혀 큰 파란을

일으켰다. 이후 관동대지진 시 학살(피살) 조선인 수는 거의 이 보도에 근거하고 있다.⁴ 『독립신문』의 ‘조선인 희생자 6,600여 명 설’은 강덕상 등에 의해 신빙성 있는 통계로 인정되었다.

한편, 일본 내각부 중앙방재회의에서 2008년에 관동대지진의 발생 과정과 그 피해에 관한 공식통계를 종합하여 공식보고서를 간행하였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는 조선인·중국인 희생자 수를 “지진 재해에 의한 사망자 수(약 10만 5,000명)의 1 내지 수(數) 퍼센트”라고 공표했다.⁵ 이에 따르면 최소 1,500여 명에서 최대 1만 3,500여 명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는 이러한 근거조차 무시하고 조선인 학살 만행을 호도·왜곡하려는 일련의 ‘역사수정주의’ 동향이 대두한 바 있다. 실로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근래 일본의 일부 보수세력들은 조선인 학살의 역사를 감추고 지우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여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구도 미요코(工藤美代子)는 2009년에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문제를 과장·왜곡한 내용이 많으며 이를 비판하는 『관동대진재 ‘조선인 학살’의 진실(關東大震災「朝鮮人

4 장세윤, 2013, 「관동대지진 때 한인 학살에 대한 『독립신문』의 보도와 그 영향」, 『사람』 46.

5 「關東大震災100年, 朝鮮人・中國人虐殺追悼大會開催へ」, 『週刊金曜日』 2023. 6.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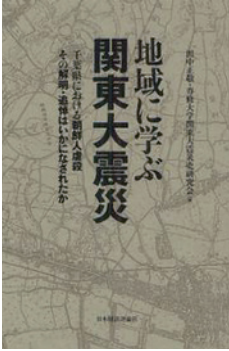
가토 코단의 왜곡 저서, 『관동대진재 ‘조선인 학살’은 없었다』

虐殺の眞實』(産経新聞出版)을 발행하여 문제가 되었다. 또 구도의 취지를 더욱 왜곡하여 아예 조선인 학살이 없었다고 부정하는 가토 코단(加藤康男)의 『관동대진재 ‘조선인 학살’은 없었다(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はなかつた!)』(ワック, 2014)도 출판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러한 부류의 책이 없지 않았다.⁶ 하지만 이러한 저작과 논리가 사실을 왜곡하고 계속해서 오늘의 일본 사회까지 조선인(재일한인)이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두드러진다.

한편, 최근 일본에서 구도 미요코 등에 의한 ‘배외적 언설(言説)’ 등에 대항하는 양심적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토 나오키(加藤直樹)는 관동대지진 당시 일본인의 조선인 학살을 다룬 『9월, 도쿄의 거리에서 1923년 관동대지진 제노사이드의 잔향(九月, 東京の路上で 1923年關東大震災ジェノサイドの残響)』(ころから, 2014)에서 부당한 인식에 대항하고 극복하는 길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보통의 인간으로 인정하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즉 상대방의 목소리에 공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 센슈대학(専修大學)에서 관동대진재사연구회(關東大震災史研究會)를 이끄는 다나카 마사타카(田中正敬) 교수는 ‘공감으로의 길’을 어떻게

6 山岸秀, 2002, 『關東大震災と朝鮮人虐殺80年後の徹底検証』, 早稻田出版 등 참조.



관동대진재사연구회 간행, 『지역에서 배우는 관동대진재』

형성해 가야 하는가, 그리고 중국인이나 일본인을 포함한 ‘제노사이드(genocide)’로서의 보편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시각에서 다나카 교수는 천재(天災)·인재(人災)로서의 관동대지진 관련 연구 현상과 과제를 개관하면서 관동대지진 시 조선인 학살을 인재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일본 『아사히신문(朝日新聞)』 기자 출신인 와타나베 노부유키(渡邊延志)의 저서 두 권이⁷ 잇달아 한국에서 번역 출판한 것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2. 일본 정부의 관동대지진 당시 문서 보관 시인과 그동안의 은폐

2023년 5월 23일 열린 일본 국회 참의원 내각 위원회에서 스기오 히데야(杉尾秀哉) 의원(입헌민주당)이 조선인·중국인 학살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나 과거 관계 기록을 조사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다니 고이치(谷公一) 방재 담당 대신(국가공안위원장)은 “정부가 조사한 바로는 정부 내에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인 대응을 취하기 어렵다”며 기존 답변서와 같은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조

7 『한국과 일본, 역사인식의 간극』(2023, 삼인); 『관동대지진, 학살 부정의 진상』(2023, 삼인).

포커스



관동대지진 때 일본인 화가
가와메 테이지(河目悌二)가
그린 조선인 학살 묘사 그림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소장



2023년 6월 처음 공개된 조
선인 학살 묘사 그림
아라이 가쓰히로(新井勝紘) 전
센슈대학 교수 공개, 일본 지지
통신(時事通信) 제공



2013년 7월 일본 국립역사
민속박물관에서 전시한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 관련
그림

사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⁸

이러한 일본 정부의 기조 속에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관련 전문가들이 6월 10일 도쿄 시내에서 학습회를 열었다. 다나카 마사타카 교수는 공문서에 남아 있는 군대나 경찰에 의한 학살 가담에 대해 일본 정부가 관여를 인정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할 책임이 있다. 피해자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인간의 존엄, 인권에 깊이 관련된 현재적 과제다”라고 비판했다.⁹

그런데 일본 정부는 6월 15일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사회민주당 후쿠시마 미즈호(福島みずほ) 당수의 질문에 대해 관동대지진 당시 내무부가 조선인에 관한 유언비어를 사실로 간주하고 단속을 요구한 공문을 방위성 방위연구소가 보관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이 공문이 조선인 학살의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정부는 그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하지 않았다.

후쿠시마 당수의 지적이나 정부 답변 등에 따르면, 1923년 9월 1일 대지진 직후에 내무성이 “조선인에 의한 방화나 폭탄 투척 등이 연달아 수도에 계엄령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전보를 전국에 발신했다. 1923년 12월 14일의 일본 제국의회에서는 다부치 도요키치(田淵豊吉)가 위협을 무릅쓰고 “많은 사람이 살해된

8 「關東大震災100年, 朝鮮人・中國人虐殺追悼大會開催へ」, 『週刊金曜日』 2023. 6. 6.

9 「朝鮮人虐殺「解明する責任ある」, 國家公安委員長答弁に學識者反論」, 『共同通信』 2023. 6. 10.

대사건을 묻지 않아도 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야마모토 곤베(山本權兵衛) 당시 수상은 “훗날 대답하겠다”라고 했다. 다음날에는 나가이 류타로(永井柳太郎)가 입수한 전보를 읽으며 “일본인은 이유 없이 조선인을 죽이는 열등민족이 아니다. 정부의 유언비어가 원인”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야마모토 수상은 “현재 조사 진행 중”이라고만 대답하며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¹⁰

이러한 사실은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이나 중국인 학살 관련 문서를 일본 정부가 소장하고 있고, 사건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학계에서도 자료의 공개와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

3. 관동대학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연구·교육의 절실함

대체로 1923년 9월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배경으로 일본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인 3·1운동과 그 후의 민족운동, 노동운동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탄압, 그리고 조선인들에 대한 공포와 증오가 일본 민중들에게 있었다는 점을 거론한다. 지진 발생 후의 혼란 속에서 이러한 이미지에 근

10 「關東大震災での朝鮮人虐殺 社民福島氏「政府流言檢證を」、『神奈川新聞』2023. 6. 16.

결국 마치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듯한
지금까지의 학살
이미지는 일본
정부가 행한 주체적
역할을 은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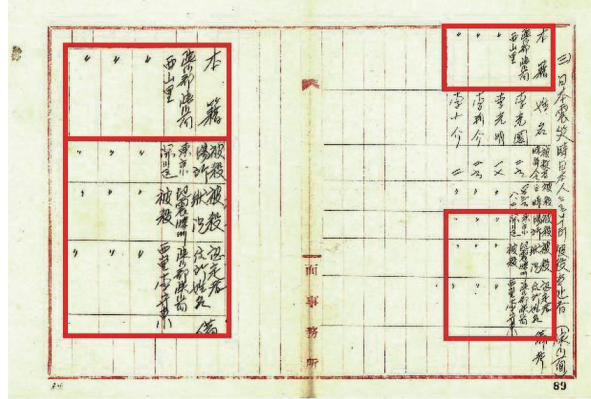
거해 “조선인이 방화하고 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확산되면서 학살이 일어났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조선인에 대한 유언비어는 일본 민중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서도 유포된 데에 주요 원인이 있었다. 일본군이 조선인을 학살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헌병이 이재(罹災) 조선인 수용시설을 조사하여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간주되는 조선인을 선별해 죽인 예가 확인되었다. 이 사례에서 일본군은 스스로 조선인을 죽였을 뿐 아니라, 수용시설 인근 마을 사람들에게 죽이도록 사주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사실은 1970년대부터 시민들이 조사를 시작하고 가해자가 자신의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야기하면서 밝혀지게 되었다.¹¹

결국 마치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듯한 지금까지의 학살 이미지는 일본 정부가 행한 주체적 역할을 은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당시 ‘일본 국민’이라고 한 조선인을 보호해야 할 일본 정부가 오히려 학살의 배경이 된 유언비어를 유포시켰고, 나아가 학살을 자행한 것이 조선인 학살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현재까지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희생자들의 이름이나 유족도 충분히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2013년에 자료가 발견되어 겨

11 다나카 마사타카(田中正敬), 2014, 「간토(關東) 대지진과 지바(千葉)에서의 조선인 학살의 추이」, 『한국 독립운동사연구』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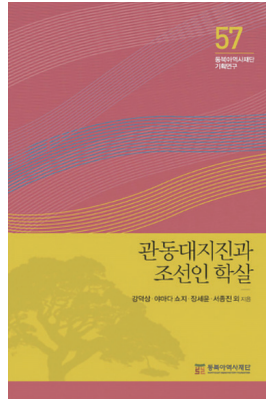


관동대지진 시 일가족 피살 사례를 보여주는 「일본 진재 시 피살자 명부」 국가기록원 제공

우 250여 명의 명단을 확인했고, 근래 100여 명의 이름을 추가로 확인했을 뿐이다. 일본에서도 상당한 연구를 통해 근래 100여 명의 명단이 확인되었다고 한다.¹²

국내에서는 국가기록원이 「일본 진재(震災) 시 피살자 명부」를 소장하고 있다. 1952년 12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수집·집계한 자료로 2013년 6월 주일본 한국 대사관 이전 시 발견되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었다. 이 명부에는 관동대지진 당시 희생자 이름, 본적, 나이, 피살 일시, 피살 장소, 피살 상황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1권 109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89명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유형별로

12 청암대학(순천) 김인덕 교수의 증언(2023년 7월 3일 청취).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발간한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2013)



동북아역사재단 지원·번역 발간 『關東大震災と朝鮮人虐殺』(2016)

살펴보면 관동대지진 피살자 251명, 3·1운동 피살자 38명이다. 사망 원인과 관련하여 일부는 ‘지진으로 사망’,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 순국’ 등으로 되어 있으며, 학살 방식도 피살, 타살, 총살 등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일가족이 모두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¹³

4. 당면 과제와 향후 전망

조선인 학살 은폐의 배경인 일본 정부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은 대단히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일본과 한국 학계의 연구와 역사교육, 시민

13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일본 진재 시 피살자 명부」 참조(2023. 7. 17 검색).

근래 일본이 전반적으로 우경화하고 역사 인식이 퇴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양심적인 시민이나 시민단체, 학자들이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4 「關東大震災100年, 朝鮮人・中國人虐殺追悼大會開催へ」, 『週刊金曜日』 2023. 6. 6. 또 아라이 가 쓰히로 전 센슈대학 교수는 조선인 학살 관련 그림을 7월 5일부터 공개 전시하고, 강연회도 개최하였다 (『隠蔽された朝鮮人虐殺』, 關東大震災100年展開催中 絵巻で惨禍の史實に向き合う』, 『讀賣新聞』 2023. 7. 19).

운동을 통해 관동대지진 시 조선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제점, 미해결 과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근래 일본이 전반적으로 우경화하고 역사인식이 퇴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양심적인 시민이나 시민단체, 학자들이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¹⁴ 100년 전 일본 간토(關東) 지역에서 일어난 조선인·중국인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의 책임을 물어 후세에 알리려는 움직임이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관계 전문가와 언론인들로 구성된 실행위원회가 2023년 9월 1일 전후 도쿄 등지에서 추모대회 등을 가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추후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관련 공동 연구와 교육, 일본 정부에 대한 공동 대응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국 및 구미권 학계와의 공동 연구도 필요하다.

근래 1923년 9월 1일 일본 관동 지방에서 일어났던 대지진(大震災)과 이후 자행된 조선인, 중국인, 오키나와인, 일본인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학살을 함께 포괄하기 위해 ‘관동대학살’로 용어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¹⁵ 향후 ‘관동대학살’로 그 개념과 용어를 정리할 필요도 있다.

1923년 9월 10일, 관동대지진 발생 열흘 뒤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외무총장 조소앙(趙素昂)의 이름으로 일본 정부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일 항의 공문」¹⁵을 발송했다. 그 이후 100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당시 조선인 학살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어떤 구체적 조치를 취했는지 별로 확인된 바 없다.

앞으로 우리 정부, 학계와 관련 연구기관 등이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해 있다.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사건의 진상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중장기적 기초 연구를 토대로 관련 정부기관과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대응 활동이 긴요한 현실이다.

15 김강산, 2021, 「관동대 학살에 대한 재일본조선인의 대응-재동경이재조선동포 위문반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4, 177쪽.

16 『독립신문』 164호(1923. 9.19).



장세운(張世胤, Chang, Se-yun)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사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독립기념관 연구원과 성균관대학교 연구교수,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장, 수선사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명예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중국 동북지역 독립운동사』(2021), 『일제강점기 학살당한 한국인들』(2021), 『일제강점기 고등교육 정책』(공저, 2022) 등 다수의 논저가 있다.

유언비어와 계엄령하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은폐와 책임 회피

서종진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장

1923년 9월 1일 정오 직전에 일본 관동 지방에 매그니튜드 7.9의 지진이 일어났다. 요코하마(横浜)와 도쿄(東京) 지역의 피해가 심각하였다. 강진과 화재로 인해 관공서를 포함하여 교통과 통신 기능이 마비되었다. 생명과 재산의 위협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지진 후에 쓰나미(津波)가 올 수 있다는 기억과 식량·물 부족 등의 상황은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당시 재해지역에는 한반도에서 이주한 조선인이 일본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일자리를 찾아 이주한 조선인들이 식민지 종주국의 도시 주변지역에 정착하기 어려운 시기에 큰 재난에 직면한 것이다. 그런데 정보가 차단된 상황에서 “조선인이 방화를 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어 넣었다”,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 “조선인이 습격해 온다”는 등의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나돌았다. 거짓으로 날조된 유언비어의 대상과 주어는 조국을 잃은 이들 ‘조선인’이었다.

일본 정부는 임시진재구호사무국을 설치하여 대책을 논의하였고, 추밀원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긴급칙령으로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례적으로 계엄령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선포했던 정책 결정자들은 일본 제국주의 전쟁을 경험하였거나, 3·1운동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민족운동을 탄압하고 통치를 경험하고 돌아온 관료들이었다. 내무대신은 3·1운동 후에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으로 활약했던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였고, 경시청 경무총감은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출신의 아카이케 아쓰시(赤池濃)였다. 계엄사령부에도 조선과 ‘만주’, 시베리아 등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는 군 지휘관이 포함되어 있었다. 헌병사령관 출신의 이시미쓰 마오미(石光眞臣)는 육군 제1사단장이었으며, 관동계엄사령부 참모장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는 시베리아 출병을 경험하였고 나중에 조선총독을 역임하였다. 이들 정부와 군, 경찰의 책임자들이 당시의 치안과 복구를 담당하고 있었고, 이들은 제국 일본의 사회주의자들과 조선인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반제국주의운동과 노동운동에서의 이들의 연대를 경계하고 있었다.

재난 지역에서는 재향군인회와 소방단, 청년단 소속의 자경단이 조직되었다. 계엄령하에서 무장한 군과 경찰, 자경단이 무고한 조선인과 중국인, 일본인 사회주의자와 노동운동가 등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총수는 약 10만~14만 명, 부상자 10만 3,000여 명, 피난 이재민 약 190만 명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상하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 발간 『독립신문(獨立新聞)』 특파원과 유학생들의 현장조사에 의하면 당시 조선인 희생자는 6,661명에 이른다. 조선인 외에 중국인 약 700여 명, 일본인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운동가 등이 학살당했다.

국가 권력과 민중들에 의한 조선인 학살은 차별과 편견에 의해 조직적

국가 권력과 민중들에 의한 조선인 학살은 차별과 편견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과 사죄 등이 따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사태 수습에 직면하여 폭력과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으로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과 사죄 등이 따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사태 수습에 직면하여 폭력과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고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제국 일본의 패전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이 글은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사건이 은폐되고 조작되었던 사실을 고찰하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유언비어와 계엄령, 자경단 등에 대해서 고찰하고 조선인 학살과 중국인 학살의 특징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다.

1. 유언비어와 계엄령 선포

지진 발생 다음 날인 9월 2일 오후에 계엄령이 신속하게 선포되었다. 전쟁이나 내란이 아니었음에도 계엄령이 선포된 계기는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유언비어로 인한 것이었다. 조선인 관련 날조된 유언비어는 지진 후에 교통과 통신 시설이 작동하지 않게 되자 정확한 정보 입수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였다. 1일 밤에 ‘조선인이 방화했다’는 유언비어는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있었다. 그러나 ‘조선인이 공격해 온다’는 등의 유언비어와 관련한 기록은 입증되지 않

조선인 관련
유언비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계엄령을
강행하기 위해
조급이라도 명분을
세우려는 구실로
이용되었던 것이
조선인 폭동설과
습격설이다.

았다. 조선인 관련 유언비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계엄령을 강행하기 위해 조급이라도 명분을 세우려는 구실로 이용되었던 것이 조선인 폭동설과 습격설이다.

일본 정부 발표에 의하면, 유언비어는 ‘불령(不逞)한 조선인’과 관련되어 있었고 무정부주의자와 노동운동가와 같은 반정부적인 과격파와의 결탁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물론 정책 결정자 및 책임자들이 유언비어의 내용과 같은 사실을 목격했다거나 방화범의 검거를 확인했다고 하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관헌들은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를 진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전달하였고, 유언비어가 날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였다. 결국 일본 정부 당국과 경찰, 언론사들의 초기 대응은 질서를 회복하여 학살을 막기보다 사태를 악화시켰다. 오히려 군과 경찰은 학살에 가담하고, 자경단을 방조하여 폭력과 불법 행위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유언비어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일본 언론은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으며,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 대부분의 언론이 유언비어를 무비판적으로 보도하여 결국 학살을 방조하였다.

유언비어 발생과 관련해 두 가지 주장이 있다. 하나는 아래(민중)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

포커스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연구의 선구자인 강덕상(姜徳相, 1932~2021)

왼쪽은 『關東大震災』(姜徳相, 1975, 中公新書), 오른쪽은 『時務の研究者 姜徳相』(姜徳相聞き書き刊行委員会 編, 2021, 三一書房)

었다는 설이고,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 만들어졌다는 설이다. 전자는 일본 국민의 타자에 대한 차별사상이 유언비어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민간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유언비어를 관헌이 확인하여 계엄령을 시행하고 확산했다는 것이다. 후자는 계엄령 포고 후 군대와 경찰력의 주도로 학살사건이 발생하였고 이후에 민간인들이 학살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중시한다. 권력기관이 조선인 폭동설과 습격설 등의 유언비어를 방조함으로써 민중의 불안과 불만을 적대감과 배외심으로 변질시켰다는 주장이다. 학살사건의 배경과 경과 즉, 유언비어로 인한 무장한 계엄군의 출동, 자경단의 학살, 언론의 묵인 등으로 볼 때, 조선인을 희생양으로 한 ‘위로부터’의 발생설이 설득력이 있다.

2. 자경단과 계엄지역의 확대

관동대지진으로 요코하마와 도쿄 등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피난민이 넘쳐났다. 민중들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자 공권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자경단이 결성되었다. 자경단의 임무는 거주 지역의 화재 진압과 재산 보호, 야간 순찰과 치안 유지 등이었다. 내무성 조사에 의하면 자경단은 도쿄, 요코하마, 가나가와(神奈川), 지바(千葉), 사이타마(埼玉), 군마(群馬), 도치기(栃木) 등 약 3,700여 곳에 설치되었다고 추정되고 있다. 재향 군인회와 소방단원, 청년회 등으로 조직된 자경단은 자연발생적으로 결성되기도 하였고, 기존의 야경(夜警)을 위한 조직이 유연비어를 접하고서 변형되거나, 경찰의 지시를 받고 조직된 자경단 등 다양한 형태가 있었다.

계엄령이 공포된 다음 날인 3일에는 요코하마, 가나가와 전역에 계엄령이 시행되었다. 지진 진원지에서 가까웠던 요코하마는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였고 경찰력이 붕괴된 상황이었다. 재해지역에 등장한 군대는 경찰과 민중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무장한 계엄군은 경찰이나 자경단의 무법행위를 단속하지 않았고, 이 지역에서는 유연비어에 대한 사실 조사도 하지 않았다. 자경단의 폭력과 살인 행태는 근거 없는 유연비어와 무장한 군대의 출동과 무기 허용 등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경찰과 당국은 학살과 관련하여 적극적 조치도 없이 공권력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자경단의 무자비한 학살은 3일과 4일에 극에 달하였고 이는 일반 민중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었다. 이는 계엄사령부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4일에 지바와 사이타마 지역으로 계엄령 시행이 확장되었다.

포커스



일본 지바현(千葉縣) 후나바시시(船橋市) 마고메공동묘지(馬込靈園)에 있는 법계무연탑(法界無緣塔)(1924년 건립, ©서종진, 2023)

지진 피해를 입지 않은 사이타마와 지바로 계엄령 시행이 확장된 것은 이들 지역에서 자경단에 의한 학살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자경단의 사이타마현 혼조(本庄)경찰서 습격으로 조선인 86명이 학살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경단의 일부는 국가 권력에 도전하는 불법세력으로 간주되었고, 계엄령 포고의 구실로 삼은 ‘조선인 폭동설’이나 ‘조선인

습격설'로 인해 조직된 자경단이 관헌과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군과 경찰은 자경단의 폭력에 직면하자 이들을 단속하고 민중의 폭주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확장 선포한 것이다.

9월 4일 오후에 계엄사령부는 “조선인을 나라시노(習志野) 구(舊) 독일군 포로수용소에 수용한다”는 명령을 시달하였다. 조선인을 나라시노에 집결시키라는 이 명령은 계엄사령부의 정책 전환을 의미하였다. 또 9월 6일 계엄사령부는 ‘조선인의 방화, 독극물의 투여’라는 유언비어가 헛소문을 알리게 되자 거리에서 조선인을 검거하고 학살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라고 지시하였다. 유언비어가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확인한 정책 결정자들이 정책 전환을 시도한 것이었다. 그것은 조선인을 불령과 양민으로 분리해서 관리하려는 의도로 내린 조치였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 및 계엄당국의 조선인 학살이라는 실책을 은폐하는 한편, 조선인 학살의 책임을 자경단에게 전가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계엄사령부는 재향군인회에 주의사항을 하달하고 자경단 단속에 들어갔다. 통제가 필요하게 된 자경단의 활동은 도난과 화재 예방에 한정되었고, 통행인 검문과 무기 소지도 금지되었다. 자경단은 이에 반발하였고 경찰과 충돌하였다. 경찰력 회복과 군대 증가에 따른 경계 태세 강화로 지역 질서가 정비되면서 자경단과 경찰의 대립이 각지에서 발생한 것이다. 도쿄, 요코하마, 사이타마, 지바, 군마 등에서 자경단에 대한 검거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한편으로 범죄 흔적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 자경단 검거와 재판이 국가 권력에 대한 범죄행위 처벌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조선인 학살로 실형을 받은 자경단은 소수에 불과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대지진 직후 이재민이 발생하는 혼란 속에서 조선인에 대한 학살이 시

작되었고 이는 계엄령 선포 후에 발생한 것이었다. 먼저 무장한 군인이 출동하여 학살이 발생하였고 여기에 자경단이 가담하여 학살을 자행한 것이다. 그런데 불령한 조선인을 둘러싼 유언비어가 근거 없는 거짓이었고 이에 따른 학살 행위는 과오였다는 엄중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 예상되었다. 그러자 정부 당국은 계엄령하에서 공권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용했던 자경단에 대해서도 태도를 바꿔서 통제를 시작하였다. 학살 은폐와 책임 전가를 위한 조치가 계엄령의 확장 시행과 자경단 통제였다.

3. 조선인 학살과 중국인 학살의 비교

정부 당국은 계엄령하에서 공권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용했던 자경단에 대해서도 태도를 바꿔서 통제를 시작하였다. 학살 은폐와 책임 전가를 위한 조치가 계엄령의 확장 시행과 자경단 통제였다.

계엄사령부가 조선인 폭동설이 근거가 없고 날조된 거짓이었음을 확인하고 계엄 방침을 수정한 시점에 사이타마와 지바 지역에 통첩과 경고가 전달되었다. 그런데 이때에 유언비어를 부정하는 명확한 지시는 없었고 ‘불령한’ 행위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학살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라시노수용소 ‘보호’ 조치 이후에도 조선인 학살이 계속된 것이다. 나라시노기병대가 보호를 요청하거나 검속되어 나라시노수용소로 이송된 조



한국·조선인 순난자 추도비(2006년 시민단체 '봉선화' 건립, ©서종진, 2023)

선인과 중국인 등을 자경단에게 떠넘겨 학살하도록 방조한 것이다. 9월 5일 이후 나라시노 주둔 기병대가 주위 마을에 조선인을 불하하여 자경단에게 학살하도록 하청한 사실은 증언과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점에 불령한 조선인의 배후에 '사회주의자가 있다'는 유언비어가 나돌았는데, 이때 가메이도(龜戶) 사건, 왕시텐(王希天) 사건, 오스기(大杉榮) 사건 등이 발생하였다. 먼저 4일 나라시노기병연대는 가메이도경찰서에서 사회주의자들을 살해하였다. 12일에는 중국 유학생과 노동자 등 재일중국인들에게 신망을 받고 있던 교일공제회(僑日共濟會) 회장 왕시텐이 살해되었다. 왕시텐은 3일에 중국인 노동자 밀집 거주지인 도쿄의 오지마(大島)에서 발생한 중국인 노동자 약 200명 학살현장을 확인하고서 이를 추적하던 중에 검거되었다. 결국 군과 경찰 당국이 오지마 사건과 가

중국인 학살은 귀국한 생존자의 증언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 조사단이 조직되었고 일본에 공식적으로 파견되었다. 이에 비해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는 철저한 은폐와 조작이 계속되었다. 귀국하려는 조선인을 저지하거나 단속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메이도 학살현장을 은폐하고 증거를 숨기기 위해 왕시텐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동대지진 당시에 조선인 외에 중국인과 오키나와 출신 일본인 등이 학살되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중국인 학살도 오인이 아니라 조선인 학살과 같이 차별과 편견에서 자행된 것이었다. 그런데 중국인 학살은 조선인 학살과 차이점이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재난의 최대 피해지이며 중국인 밀집지역인 요코하마에서는 대규모 중국인 학살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고, 약 200여 명의 중국인 학살은 중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이었던 도쿄 고토구(江東區) 오지마(大島)에서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주요 원인은 일본인과 중국인 노동자 사이의 갈등과 대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오스기 사카에와 왕시텐 사건은 재해 초기 단계의 조선인 학살과 같은 민족 박해와는 다른 성격의 학살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건 은폐가 진행되었으며 계엄령 확대와 정책 전환 이후 단계에서도 학살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이에 대한 진상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죄도 없었고 장기간 사실에 대한 연구조차 할 수 없었다. 그 결과 학살에 대한 진실규명과 가해자 처벌, 사죄와 배상, 그리고 추도에 이르기까지 조선

인과 중국인 학살을 비교하여 본다면 차이점이 적지 않다. 오스기 사건과 왕시텐 사건, 오지마 학살사건 등에 대해서는 사실이 밝혀진 결과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도 있었지만, 이에 비해서 조선인에 대한 언론 보도는 극히 제한적이였다. 중국인 학살은 귀국한 생존자의 증언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 조사단이 조직되었고 일본에 공식적으로 파견되었다. 이에 비해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는 철저한 은폐와 조작이 계속되었다. 귀국하려는 조선인을 저지하거나 단속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일본에서는 9월 8일경에 조선인 귀국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귀국 선인(鮮人) 저지에 관한 건’(9월 15일)이라는 비밀문서는 조선인 학살을 철저하게 은폐하려는 조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4. 맺음말

이제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 학살사건으로부터 100년이 되었다. 라디오가 없던 당시는 신문이 대표적인 정보 전달 수단이었다. 당시에는 정부가 전신·전화 등 통신기관을 통제하고 있었고, 신문 보도 기사에 대한 검열과 통제가 계속되고 있었다. 일본 제국 정부는 유언비어를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신문의 관련 비판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극히 소수의 조선인 학살 관련 기사도 일부를 제외하고 신문사 독자적인 조사 발굴이 아니라 대부분 정부가 감출 수 없는 사례를 제공하여 보도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조선인 학살이 발생하고 계속해서 은폐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인 관련 유언비어의 발생 배경과 계엄령 선포를 강행한 일본 제국주의 정부의 정책 과정과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계엄령과 관련하여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관동계엄사령부 막료 참모장은 시베리아출병에서 돌아온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였으며, 당시 군부는 다이쇼 데모크라시(大正デモクラシー)와 워싱턴체제 이후의 군축 움직임, 시베리아출병 등으로 인해 위신이 저하된 상태였다. 군부는 저하된 위신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던 것이다. 즉, 정책결정자들은 치안 유지를 위한 명분을 내세워 계엄령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였고, 민중의 불안감은 조선인에 대한 적대감과 극단적인 배외의식으로 변형되어 무자비한 폭력으로 표출되었다. 다음으로 정책결정자들은 무고한 조선인 학살이 해외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강했다. 그들에게는 조선인의 생명보다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다. 사실을 은폐하고 숨기기 위해서 학살을 멈추려는 조치는 적극적으로 취해지지 않았고, 자경단과 공조하거나 방임하면서 학살이 자행되었다. 일본 정부는 국가 권력에 의한 이러한 학살과 은폐·조작을 인정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조선인 학살은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민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서 비롯된 민족문제였으며, 진상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중국인 학살의 경우는 조사단 파견과 진상규명 등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요구가 일본 외무성을 통해 진행되었다. 이에 비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였던 조선인 희생자의 신원을 밝히고 위령하고 추도하는 일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일본 제국주의 정부와 조선총독부의 연계로 조선인 귀국을 저지하는 조치가 취해졌고, 나아가 생존자에 대한 통제가 장기간 엄격하게 진행된 결과, 살아남아서 귀국하여 증언하고 실상을 폭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차단된 상황이 계속되었다.

포커스

현재 일본에서는 매년 9월 1일을 ‘방재(防災)의 날’로 지정하여 대지진으로 인한 역사와 그 교훈을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자이니치(在日) 코리안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가 사회문제가 되고 ‘혐한(嫌韓)’ 정서가 확산되고, 보수우익과 역사수정주의 세력이 관동대지진 학살에 대한 사실 왜곡과 부정, 학살의 정당화와 책임 회피, 추모제 방해 등을 자행하고 있다.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사건은 민족 차별에 의한 민족 수난사로 기억되어야 하고, 학살의 책임과 주체에 대한 규명과 함께 희생자에 대한 추도, 기억의 계승과 교육 등은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서종진(徐鍾珍, Seo, Chong-chin)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장

일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정치학연구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관동대지진 90년(2013)경에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관련 연구성과로는 『關東大震災と朝鮮人虐殺』(공저, 2016),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관련 번역 자료집(1)』(편역, 2023) 등이 있다.

1920년대, 관동대지진 전후 두 번의 조선인 학살 식민주의와 예견된 비극

배영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위원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지난 니가타현(新潟縣)의 학살사건이 있었고, 이어 관동대지진 당시의 동양 미증유의 대규모 학살사건이 있었다. … 또다시 학살의 참극은 미에현(三重縣)에서 일어났다.

위 글은 1926년 1월 미에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재동경조선무산청년동맹회, 일월회, 삼월회 등 재일조선인 네 개 단체가 작성한 격문이다. 이 중 관동대지진 당시의 사건이란 1923년 일본의 수도권 일대를 강타한 관동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군, 경찰, 민간인이 6,000여 명의 조선인을 학살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1923년 이전 니가타현의 학살과 이후의 미에현 학살은 무엇이며, 왜 당시 재일조선인들은 미에현 사건을 세 번째 조선인 학살로 여겼을까.

시간 순서대로 우선 니가타현 사건에 대해 알아보자.



니가타현 조선인 노동자 학살사건을 다룬 기사(『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1922년 7월 29일 자)

1. 1922년 니가타현 사건

이 사건은 1922년 니가타현 나카쓰강(中津川) 상류의 수력발전소 공사현장에서 600여 명의 조선인 노동자가 민족 차별을 받으며 중노동을 하다가 적어도 12명이 ‘학살’(학대치사 및 증상)당한 것을 가리킨다. 이 사건은 7월 29일 일본의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이 대서특필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신문 지면에 실린 기사 제목, “시나노강(信濃川)을 자꾸 떠내려 오는 조선인 학살 사체”, “도망치면 고통스럽게 죽여 산속에도 부패한 사체가 굴러다닌다”, “신체에 큰 돌을 달아 절벽에서”만 보더라도, 이 기사를 본 조선인들의 충격과 공포, 분노를 짐작할 수 있다.

학살 소식을 접한 서울과 도쿄의 조선인들은 ‘사실무근’이라는 조선총독부의 발표를 믿지 않고 조사회를 꾸리고 조사위원을 현지에 파견했다. 현지 경찰과 행정, 건설사의 방해로 조사위원의 활동은 크게 제약되었다.

포커스

방해와 제약 속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직접 전해 들은 조사 내용은 조선의 『동아일보』, 상하이(上海)의 『독립신문』 등에 상세히 보도되었다. 그 내용은 모집 단계와 노동현장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겪어야 했던 민족 차별과 가혹한 중노동, 그리고 감시체제의 폭력성이었다. 조선인 노동자들은 밖에서 자물쇠를 걸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는 ‘감옥방’이라 불리는 감금형 합숙소에서 생활하며 임금, 수당, 식사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인보다 불리한 계약·노동 조건과 가장 위험하고 힘든 작업을 강요받았다. 혹사와 차별을 견디다 못해 도망치면 건설사와 결탁한 현지 경찰과 건설사에 고용된 감시원들에게 붙잡혀 잔인한 폭행을 당했다. 감시원들은 도망친 조선인들을 붙잡아 벌거벗긴 채 나무에 묶어 놓고 각목으로 때리거나 쇠갈고리로 찔렀고, 겨울에는 눈 속에 파묻기도 했다. 박진열, 박수열 형제는 감시원의 눈을 피해 나흘 밤낮 산속을 헤매다 굶어죽었다. 조사위원들은 이렇게 조선인 노동자들이 도망치다 잡혀 가해진 폭력으로 죽음에 이른 것을 학살로 보았으나 일제 당국은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은커녕 일본인 특파원의 현지조사 내용을 근거로 학살을 조선인 탓으로 돌리고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조선인 조사위원보다 약 일주일 늦게 조선의 일본어 신문 『경성일보』도 도쿄지국장을 현지에 파견했다. 애초부터 일본의 조선 식민통치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그러니까 학살을 부정하고 조선인들의 분노와 항의를 무마시키기 위한 조사였다. 일본인 지국장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은 산골 마을에 발전소 공사 때문에 갑자기 수천 명 규모의 노동자, 특히 말도 통하지 않는 수백 명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모여들고 예부터 신성시하던 산에 구멍이

여성과 어린아이를
닥치는 대로 폭행
한다는 유언비어와
'가해자'로서의
조선인의 이미지가
산간 오지 마을에
뿌리내리고 있었고,
유언비어의 생성 및
전파 주체인 마을
주민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의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뚫리고 험난한 작업으로 부상자까지 속출하자 마을 주민들은 공포심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조선인 노동자들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에 싸움까지 일삼으며 마을을 활보하고 다닌다. 심지어 여자만 보면 '능욕'하고 어린아이들을 잡아서 피를 빨아먹기까지 한다. 이러한 소문이 돌자 어떤 일본인은 조선인 대여섯을 때려죽여서 강에 버렸다는 등의 거짓말로 허세를 부렸다. 이렇듯 조선인 학대·학살은 모두 조선인의 평소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에 대한 주민들의 공포심과 심리적 복수심에서 비롯된 허세일 뿐 사실무근이다. 그리고 조선인 노동자의 다소 불리한 조건이나 열악한 노동환경은 사실이나, 학대를 받거나 학살을 당한 일은 없다. 오히려 현장에서 우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지식계급'자들이 '음울한 사상'을 불어넣어 도망이나 반항을 선동하는 것이 문제다. 이 사건은 조선인들이 원래 품고 있던 의심과 공포, 비뚤어진 심성 등 심리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스스로 자초한 경거망동의 결과다.

여성과 어린아이를 닥치는 대로 폭행한다는 유언비어와 '가해자'로서의 조선인의 이미지가 산간 오지 마을에 뿌리내리고 있었고, 유언비어의 생성 및 전파 주체인 마을 주민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의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조선인 노동자들이 ‘지식계급’에게 선동된다는 내용은 3·1운동 이후 일본의 언론보도로 인해 급속도로 넓고 깊게 뿌리내린 ‘불령선인(不逞鮮人)’의 대표적 표상이다. 일본이 만들어낸 ‘불령선인’ 표상에는 조선의 독립운동에 대한 경계와 조선인에 대한 편견·멸시, 그 반대급부로서의 불안과 공포, 일본인에 대한 조선인의 원함과 복수 등의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이 만들어낸 ‘불령선인’ 표상에는 조선의 독립운동에 대한 경계와 조선인에 대한 편견·멸시, 그 반대급부로서의 불안과 공포, 일본인에 대한 조선인의 원함과 복수 등의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8월 말, 도쿄에서는 조선인 현지 조사위원의 보고를 듣고 학살에 항의하는 연설회가 열렸다. 연설회에 일본인을 비롯하여 2,0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이 사건으로 촉발된 조선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관심은 재일조선인 노동자의 조직화를 본격화시켜 같은 해 11월 동경조선노동동맹회가 결성되었고 일본인 노동자와의 연대도 시작되었다. 그러나 일본인 노동자 및 진보적 지식인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노동자 계급의 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식민 지배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조선인의 인식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조선인들은 이 사건이 하나의 돌발적 사고가 아니라 식민 지배하 조선인 노동자가 일본의 노동현장에서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필연적 현상으로 보고, 비슷한 사건이 또다

시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했다. 그리고 이 염려는 현실이 되었다.

바로 1년 후인 1923년 9월, 관동대지진 때 산간 오지가 아니라 수도 도쿄와 수도권 일대에서 조선인 학살이 자행되었다. 그리고 다시 3년이 지난 1926년, 이번에는 미에현에서 학살사건이 벌어졌다.

2. 1926년 미에현 사건

미에현 미나미무로군(南牟婁郡) 기모토초(木本町) 인근 터널공사에 200명 남짓의 조선인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었다. 사건은 1926년 1월 2일 일본인이 조선인 김명구와 다투다가 그의 가슴을 단도로 찔러 중상을 입힌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항의하는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고, 이 싸움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인이 조선인 노동자 합숙소를 습격했다. 이때 저항하던 이기윤이 갈고리에 머리가 찍혀 사망했다. 누군가가 비상 나팔을 불며 마을 주민을 자극하여 조선인에 대한 경계, 공격이 시작되었고 조선인이 불을 지르고 폭력을 휘두른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퍼졌다. 관할 경찰서장의 요청으로 재향군인, 소방대원, 청년단원 등이 자경단을 조직하고 총, 칼, 쇠갈고리와 같은 무기를 들고 조선인을 무차별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배상도가 살해되었고 조선인 노동자들은 일본인을 피해 산이나 터널로 도망갔다. 조선인이 방어용으로 들고 있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면서 중상을 입은 사람도 많았다. 이후 현지에 있었던 조선인은 모두 다른 지역으로 쫓겨났고 사망한 이기윤과 배상도의 유해는 눈 덮인 산 속에 방치되었다가 12일이나 지난 후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화장되었다. 재판은 진행되었지만 조선인에게 더 무거운 판결이 내려졌다. 그리고 현지의 재일조선인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추도활동을 계속

포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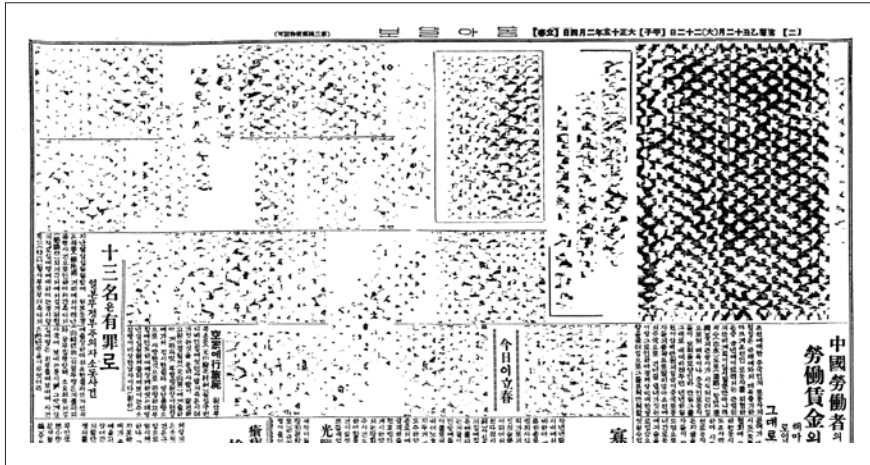


고쿠라쿠지(極樂寺)에 세워진 이기윤, 배상도의 묘비

하고는 있지만, 부상자, 행방불명자, 추방자 등 조선인 피해의 진상은 제대로 밝혀진 바 없다.

한편 조선총독부는 유감스럽지만 설을 맞아 들뜬 일부 일본인의 경거망동에 불과한 것으로 조선인을 타 지역으로 보낸 것은 추방이 아니라 보호하려 한 것이라는 취지의 성명을 서둘러 발표했다. 이 사건의 진상이 조선에 알려지면 3년 전 관동대지진, 4년 전 니가타현의 학살 기억까지 소환되어 조선인의 분노와 항의가 견잡을 수 없으리라 두려워한 까닭이다. 그렇지만 조선인들은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 발표를 믿지 않고 독자적인 현지조사와 항의운동을 전개했다. 학살이 거듭될수록 조선인의 대응 요령이 축적된 것이다.

일본의 사회운동단체와 후세 다쓰지(布施辰治) 변호사 등 진보 인사까지 가세하여 조선인의 대응 규모는 4년 전보다 훨씬 확대되었다. 그만큼 당국의 탄압도 거세져 대부분의 연설회, 집회가 도중에 중지되었고 매번 체포자가 발생했으며 이를 전한 조선의 신문기사는 검열로 모두 삭제되



검열로 삭제된 『동아일보』 1926년 2월 4일자

학살이 일어나기 전 또는 학살이 진행되는 동안 조선인에 대해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 확산되었고, 경찰 및 행정 당국은 유언비어 확산과 학살을 방조 또는 주도했다.

었다. 관동대지진을 겪고 나서 조선의 신문에 ‘학살’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조선인, 특히 제일조선인에게 미에현 사건은 세 번째 학살과 다름없었다.

3. 세 차례 조선인 학살의 공통점

1922년의 니가타현, 1923년의 관동대지진, 1926년의 미에현, 이 세 번의 조선인학살사건의 공통점은 단지 제국 일본의 민간인이 식민지 조선인을 학살했다는 것만이 아니다.

첫째, 학살이 일어나기 전 또는 학살이 자행되

는 동안 조선인에 대해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 확산되었고, 경찰 및 행정 당국은 유언비어 확산과 학살을 방조 또는 주도했다는 점이다. 니가타현 사건의 경우 이미 음주, 고성방가, 능욕, 살해, 횡포 등의 단어로 묘사되는 조선인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다. 일부 소문에 대해서는 누가, 왜 지어낸 거짓말인지까지 알면서도 마을 주민들은 유언비어 확산에 주저하지 않았고 그 결과 조선인이 없는 다른 지역까지 전파되었다. 발전소 공사 때문에 신성한 산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충분히 공포스러웠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그 공포를 식민지 조선에서 온, 낯선 이방인들 탓으로 돌리고 악성 유언비어를 만들며 허세를 떨었고, 현지 경찰은 조선인 노동자에게 가해진 폭력을 방조했으며 건설사와 행정기관은 진상조사를 방해했다. 관동대지진 때에도 마찬가지다.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자 일본인들은 값싼 조선인 노동력 때문에 힘들어졌다는 박탈감과 지진으로 인한 공포심에서 모든 문제를 조선인 탓으로 몰아가면서 학살로 이어졌다. 이때는 일본 정부 즉 군대와 경찰이 공신력을 동원하여 유언비어가 사실인 양 각지에 전달했을 뿐 아니라 조선인을 직접 죽이기도 했고 민간인이 죽이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미에현 사건 때에도 평소 조선인이 무전취식, 방약무인, 방화, 폭행, 불온행동을 일삼았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고, 학살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관할 경찰서장의 자경단 구성 요청이었다.

둘째, 가해자의 폭력성과 폭력의 정당화를 들 수 있다. 니가타현 사건과 관동대지진 때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였지만, 미에현 사건 때에도 조선인에 대한 주민들의 적개심이 상당했고 살기등등한 광기 어린 분위기였다고 한다. 주민들이 검거된 조선인에게까지 위해를 가하려 하자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하지 못하고 경찰 순시선에 태워 타 지역으로 이송했

을 정도였다. 관동대지진 때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조선인을 자경단원이 학살하는 장면은 영화 <박열>에도 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부정적인 이미지를 덮어쓴 ‘불령선인’으로부터 가족이나 마을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한다. 관동대지진 때 자경단의 학살행위를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학살을 부정하는 논자들의 진부한 상투어고, 미에현 사건의 가해자는 지역의 선구자, 위인으로 칭송 받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와 행정·치안 당국의 사건 축소 및 은폐,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은 지금까지도 이 세 사건 모두 명확한 진상규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살과 폭행과 같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아 일본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는 식민지 조선인들의 처지를 가장 근본적인 공통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내지(조선)에 있어도 모욕! 외지에 나아가서도 박해! 이것이 조선 사람의 오늘날 도처에서 당하는 바 현상이다. 전보를 접할 때마다 ‘조선인’ 세 글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구타, 감금, 체포, 능욕, 참사 등의 놀랄 사실이 적혀 있지 아니한 전보를 별로 볼 수 없을 만큼 재외동포의 상황은 참으로 처참하기 짝이 없다. … 어찌 몇몇 노동자들의 일시적 충돌이라 하여 간과할 바이라.¹

누군가 앞서 세 번의 학살을 모른 채 위 기사를 읽었다면 과장된 표현이라 여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알고 나면 오히려 저 짧은 문장에 미처 담지 못한, 식민지 조선인의 처지에 대한 애환과 분노까지 전해짐을 느낀다.

이상 잘 알려지지 않은 1920년대 두 번의 학살과 관동대지진 때의 학

조선인 학살은 이와 같은 식민주의에 바탕을 둔, 제국 일본의 폭력적 식민 지배와 조선인의 저항이 시작된 이래 ‘예견된 비극’이었다.

살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1922년의 니가타현 학살부터 다루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국 일본에 의한 조선인 학살 또는 학살에 비견되는 폭력적 행위가 이때 처음 자행된 것은 아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의병투쟁과 3·1운동에 대한 섬멸과 폭력적 진압을 통해 이미 제국 일본은 자국민들에게 조선인 즉 ‘불령선인’은 죽여도 좋다는 폭력 행사의 권리를 넘겨주었다. 여기에 차별, 적의와 멸시, 독립운동에 대한 경계, 조선인을 죽임으로써 일본인 여성을 지키고 지역사회와 국가에 공헌한다는 비뚤어진 젠더규범과 비틀린 자긍심 등이 더해진 결과 학살로 이어졌다. 이러한 식민주의는 식민통치와 이에 대한 조선인의 저항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일본 사회와 민중 사이에 널리 그리고 깊이 뿌리내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 조선인 학살은 이와 같은 식민주의에 바탕을 둔, 제국 일본의 폭력적 식민 지배와 조선인의 저항이 시작된 이래 ‘예견된 비극’이었다.

제국주의도 식민 지배도 종식된 2023년, 학살은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을까. 직접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특정 인종이나 민족, 종교, 지역, 성별 등에 대한 차별과 적의, 혐오는 지금도 존재한다. 일본에서는 대형 자연재해

1 『시대일보』 1926. 1. 8.

포커스

가 발생할 때마다 재일조선인에 대한 악성 유언비어가 에스엔에스(SNS)에 등장하고, 한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 난민,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특정 지역 출신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고 인간의 존엄이 평등하게 지켜지는 평화로운 세상과 공생 가능한 한일관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도 1920년대 조선인 학살의 역사는 은폐나 왜곡 없이 기억, 계승되어야 한다.



배영미(裴始美, Bae, Young-mi)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위원

일본 히토쓰바시대학(一橋大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근대사 및 한일관계사를 전공하였으며 주로 식민지기 조선인 유학생을 비롯한 재일조선인의 역사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현재 독립기념관의 학술연구 기획 및 관련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전후 일본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기억과 ‘책임’의 서사

황익구 동아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1. ‘책임’을 둘러싼 서사의 행방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일본의 패배로 끝나자,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General Headquarters)는 일본의 비무장화와 민주화를 표방하며 각종 점령정책을 전개함과 동시에 전쟁책임 추궁을 위해 전쟁 지도자의 체포와 기소,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 재판) 및 BC급 전범 재판, 공직 추방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추어 일본 내의 전쟁책임론은 비록 ‘민중’의 전쟁책임 문제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반성이 이루어지는 단계에까지 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국가와 전쟁 지도자에 국한하지 않고 ‘민중’에게까지 책임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움직임이 부분적으로나마 확인된다.

그러나 패전 이후 일본 사회에서 전쟁 책임 문제와 함께 논의되었어야 할 또 하나의 빼놓을 수

* 이 글은 필자의 논문 「전후 일본의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의 기억과 문학 담론」(『한일민족문제연구』 42, 2022. 6)을 바탕으로 쓴 글임을 밝힌다.

없는 문제는 식민지 지배 책임 문제였다. 그러나 당시 일본 사회에서 식민지 지배 책임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미온적인 접근에 그치고 말았다. 특히 식민지 지배에서 기인한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 문제는 극히 제한적으로 논의되었으며, 그나마도 논의 대부분은 재일조선인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문제에 대한 책임은 주로 군국주의 군벌과 경찰, 또는 관료와 자본가 계급에 국한하여 다루어졌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1946년 9월 1일에 개최된 ‘관동대진재학살희생자추도대회’를 보도한 『해방신문(解放新聞)』에 “학살의 원흉인 군벌과 경찰 정치를 재기(再起)시키지 말라”는 슬로건이 확인된다. 또 1948년 9월 3일 자 『해방신문』의 사설 「대학살당한 관동대진재」에는 “우리는 이 학살의 범죄자들이 일본인 전체의 의사(意思)가 아니고 일부 극소수의 배타적이며 독선적 편협한 국수주의적 천황관료와 반동군벌의 소의소욕(所意所慾)이었음을 명확히 구분해 인식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조선인 학살의 주체는 군벌과 관료이며, 그 책임 또한 군벌과 관료에 있다는 답론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재확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문제에 대한 책임은 주로 군국주의 군벌과 경찰, 또는 관료와 자본가 계급에 국한하여 다루어졌다.



『해방신문』(1946년 9월 1일 자)



『해방신문』(1948년 9월 3일 자)

되는 양상이 전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조선인 학살의 책임 문제에서는 전쟁 책임을 추궁하는 문제와 같이 일본 민중의 책임 문제를 지적하는 양상은 그다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일본 민중의 조선인 학살 문제에 대한 책임의 서사에 있어서 동시대의 담론과는 다소 차별적인 양상을 제시하는 문학 담론이 확인되어 주목할 만하다. 그 작품은 재일본조선민주청년동맹(在日本朝鮮民主靑年同盟) 기후현(岐阜縣) 히다지부(飛驒支部)가 1947년에 비매품으로 출판한 에마 슈(江馬修)의 『피의 9월(血の九月)』이다. 『피의 9월』은 1947년에 처음으로 출판된 이후, 1953년 9월에 잡지 『인민문학(人民文學)』에 후반부만이 수록되었으며, 1989년에는 재일문학가 이회성(李恢成)의 제안으로 재일문예잡지 『민도(民濤)』에 전편(全編)이 다시 수록된 작품이다.

조선인 학살의 책임 문제에서는 전쟁 책임을 추궁하는 문제와 같이 일본 민중의 책임 문제를 지적하는 양상은 그다지 나타나지 않았다.

작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피의 9월』은 작가 자신이 밝힌 바와 같이 1930년 8월에 완성된 원고였지만, 출판으로까지는 이르지 못한 작품이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그 때문에 『피의 9월』에 대한 작가의 언급은 물론 독자의 반응 역시 작품이 처음으로 출판된 1947년 이

후에나 등장한다. 특히 이 작품의 출판 배경에 조선민주청년동맹(이하 ‘민청’)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문제와 관련하여 출판된 동시대의 다른 문학작품과 비교·검토의 여지 또한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2. 문학적 상상력과 재현의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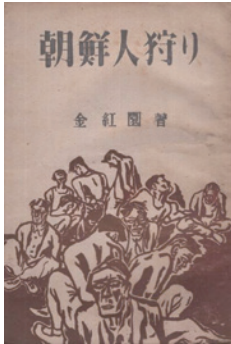
먼저 본격적으로 『피의 9월』을 살펴보기에 앞서, 해방 직후에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문제를 다룬 동시대의 또 다른 문학작품을 통해 ‘책임’에 대한 서사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김홍원, 『조선인 사냥』

작가 김홍원(金紅園)은 『조선인 사냥(朝鮮人狩り)』(1948)의 집필 의도에 대해 해방 이후에도 재일조선인의 불안하고 불안정한 정치적·사회적·민족적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여전히 조선인학살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도 조선인과 일본인의 융화를 도모하고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진상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

작품의 개략적인 줄거리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와세다대학에 다니는 조선인 학생들이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이 벌어지는 동안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신들의 안전과 조선인 동포의 구제를 위해 활동한다. 선출된 위원들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 지역으로 가서 정보를 수집하고 피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지만 위원 중에서도 희생자가 나오는 등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결국 의장인 김재천(金在天)은 일본인 여성위원인 모리카와 교코(森川京子)와 함께 일본인으로 분장



김홍원, 『조선인 사냥』

하여 조선으로 피난하게 된다. 김재천과 모리카와는 조선 민중들과 함께 조선인 학살의 책임이 천황제 관료와 부유한 자본가 계급에게 있다며 이를 항의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로 찾아갔다가 주모자로 지목되어 투옥된다.

줄거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에서는 조선인 학살이 일본 민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부 천황제 관료와 자본가 계급의 계획적인 테러에 의한 것으로 그 책임 또한 천황제 관료와 자본가 계급에 있다는 인식을 전하고 있다. 즉 김홍원의 『조선인 사냥』에서는 학살의 책임을 천황제 관료와 자본가에게 치중되는 양상으로 기술함으로써 일본 민중에 대해서는 학살에 가담 또는 동원된 것은 되었지만, 책임의 서사에서는 배제되거나 극히 부분적이고 한정적인 범위에서 다루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동시대의 재일조선인운동사에서 일본 민중의 학살 책임이 국가의 책임에 수렴되어 인식되는 양상과 유사하며, 일본 민중의 학살 책임 그 자체를 문제시하거나 철저한 규명을 촉구하는 단계까지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에마 슈, 『피의 9월』

그렇다면 에마 슈가 지은 『피의 9월』의 서사

양상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피의 9월』은 당초 1930년 8월 무렵에 탈고되었지만, 출판사의 거절로 출판되지 못했다가 패전 이후 비로소 빛을 보게 된 작품이다. 출판사의 거절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작품 내용으로 비추어 보면 당시 사상 탄압 및 언론·출판 통제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피의 9월』이 출판된 경위를 살펴보면 일본이 패전한 후 에마 슈는 고향인 기후현으로 이주하였으며, 1947년에 민청 기후현 히다지부 박영흠(朴泳欽)을 만나서 『피의 9월』 원고에 대해 이야기했고, 박영흠과 그 동지들의 제안으로 출판이 결정되었다. 비록 비매품에 2,000부 정도 소량으로 출판되기는 했지만, 『피의 9월』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민청 기후현 히다지부가 『피의 9월』을 출판한 배경은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사건에 대한 계몽을 활동 목표로 삼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피의 9월』은 전반부와 후반부, 혹은 상편과 하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스토리 또한 전혀 다른 두 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잡지 『민도』에 수록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먼저 상편은 자유사상가이자 인도주의자인 호리 신이치(堀進一)와 그 가족, 그리고 그 주변의 이웃 주민들이 지진 발생 후 함께 피난생활을 하면서 보고 들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 속에는 지진 발생 후 군대와 경찰의 활동, 그리고 일본 민중의 심리와 학살 가담, 그 외 조선인 학살에 관한 많은 정보와 생생한 묘사, 호리 신이치의 자기반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하편의 내용은, 열여섯 살의 공장 견습공 후쿠다 기치코우(福田吉公)가 지진 발생 후 공장주의 어린 딸 후미코(文子)를 업고 피난 중에 일행과 떨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목격한 조선인 학살 장면, 군대와 경찰을 포함한 자경단의 활동, 사회주의자 지인들의 체포와 학살, 일본 민



에마 슈, 『피의 9월』

중의 움직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하편은 관동대지진 당시 많은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가메이도(龜戸)경찰서에 검속되어 학살당한 사건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상편과 구별되는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상편을 살펴보자. 주지하는 바와 같이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자 일본 정부는 9월 2일에 도쿄부(東京府) 일부를 시작으로 계엄령을 발령하고, 다음 날인 3일에는 도쿄부와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전역으로 계엄령을 확대하였다. 『피의 9월』에는 9월 2일의 계엄령으로 나라시노(習志野)기병연대가 국도를 따라 도쿄로 출동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때 도쿄에서 지바(千葉) 방면으로 향하는 수많은 피난민이 도중에 기병연대의 출동을 목격하게 되고 피난길 가장자리로 길을 비켜주며 군인들을 향해 조선인 학살을 외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화자는 이러한 일본 민중의 외침을 미치광이 같은 소리라고 비난하였지만, 민중의 외침은 도쿄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빈번해졌다. 그런데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주목할 부분은 계엄령으로 출동한 기병연대의 병사들이 조선인 학살을 외치는 일본 민중의 외침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고 묘사한 점이다. 즉 계엄령으로 출동한 군대는 일본 민중의 외침과 의견을 통해 출동의

정당성과 역할에 대한 확신을 부여받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내용은 조선인 학살이 군대의 책임 이전에 일본 민중의 책임임을 시사하는 서사가 아닐 수 없다. 마치 군인이 일본 민중을 선동한 것이 아니라 일본 민중이 군인들을 선동한 것이라는 인상마저 들게 한다.

이와 같은 해석은 일본 민중의 광기에 찬 폭력 행위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입장을 견지하던 자유주의 지식인 신이치가 일본 민중이 퍼트린 데마(demagogy)와 유언비어를 마치 진실인 양 믿게 되고, 곧이어 그 데마와 유언비어가 실상은 실체가 없는 환상에 불과한 것이며 조선인에 대한 맹목적인 불신의 결과라는 것을 신이치 자신도 일본 민중의 일원이라고 자각하게 되는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설령 자신이 조선인 학살에 대해 분개하고 사회의 부정의와 폭학에 대항한 자유주의자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일본 민중의 데마와 유언비에 대해 잠시나마 동조하고 국가 권력에 대해 신뢰와 지지를 보낸 민중의 일원이었다는 한계를 반성하는 장면은, 지식인의 자기반성과 일본 민중의 조선인 학살에 대한 책임 문제를 동시에 지적하는 서사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하편의 서사 양상을 살펴보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하편은 조선인 학살의 문제보다 사회주의자 학살에 대한 문제를 더욱 비중 있게 그려내고 있지만, 주목할 부분은 일본 민중이 단지 데마와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데 그치지 않고 조선인 학살에 직접 가담하는 학살의 주체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일본 민중은 곳곳에서 조선인 색출에 혈안이 되어있었으며, 동시에 스스럼없이 학살도 자행하는 집단으로 묘사되고 있다. 즉 일본 민중이 가담한 학살행위가 군대나 경찰의 학살행위와 비교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학살행위에 가담한 일본 민중이 병사들이 휴대하는 군도는 물론 총까지 군대로부터 대여받았다는 점은

일본 민중의 학살행위가 군대나 경찰의 학살행위에 수반하는 부수적인 폭력행위가 아니라는 것, 나아가 군대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른 수동적인 행위라기보다는 군대의 묵인하에 능동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것을 시사하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마 슈의 『피의 9월』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단지 군대나 경찰과 같은 국가 권력의 책임으로 귀결시키는 서사방식이 아니라 일본 민중의 책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서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동시에 일본 민중의 조선인 학살에 대한 자기반성도 촉구하는 양상으로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시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담론과 결을 달리하는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에마 슈의 『피의 9월』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단지 군대나 경찰과 같은 국가 권력의 책임으로 귀결시키는 서사방식이 아니라 일본 민중의 책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서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3. 기억과 책임

2023년은 관동대지진이 발생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지난 6월에 일본의 보수 계열 신문 중 하나인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은 「관동대지진 100년 교훈」이라는 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6월 13일에 게재한 기사 「교훈<5> 유언·폭력 단숨

일본 민중의 자기반성과 국가 책임의 추궁이라는 과정은 기억과 상기, 재현과 전승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동반될 때 그만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닐까? 설령 그것이 문학적인 상상력이 재구성한 행위일지라도.

에 확대(教訓<5>流言·暴力 一氣に擴大)」에서는 일본 정부중앙방재회의가 2008년에 정리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대진재 당시에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 ‘우물에 독을 넣었다’ 등의 유언비어를 들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자경단을 결성하고, 일본도나 도끼, 쇠갈고리로 무장하더니 조선인을 닥치는 대로 힐문하고 결박하여 폭행을 일삼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기술하였다. 지금까지 조선인 학살을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았던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례적인 기사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 정부나 국가의 책임에 대한 지적은 여전히 찾아볼 수 없으며, 하물며 자경단으로 대표되는 일본 민중의 책임 역시 오늘날에도 재난현장과 인터넷에서 반복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악의적인 유언비어의 확산 현상을 문제 삼느라 가려질 뿐이다.

일찍이 오랫동안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문제에 천착해온 야마다 쇼지(山田昭次)는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민중의 책임을 지적하며 “일본 국가가 스스로는 반성할 수 없는 체질을 갖고 있는 이상 국가체제에 함몰되어 조선인 학살에 가담했던 일본 민중이 먼저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그들을 조선인 학살로 몰고 갔던 국가 책임을

추궁하는 주체가 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한다.¹ 즉 조선인 학살에 가담했던 일본 민중이 자기반성과 함께 국가 책임을 추궁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 민중의 자기반성과 국가 책임의 추궁이라는 과정은 기억과 상기, 재현과 전승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동반될 때 그만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닐까? 설령 그것이 문학적인 상상력이 재구성한 행위일지라도.

1 山田昭次 저, 이진희 역, 2008,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에 대한 일본 국가와 민중의 책임』, 논형, 7쪽.



황익구(黃益九, Hwang, Ik-koo)

동아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일본 쓰쿠바대학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쓰쿠바대학 외국어센터 특임연구원, 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아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하였으며, 전후 일본문학(문화)과 재일코리아의 문화예술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한일 시민의 노력과 과제

성주현 청암대학교 제일코리아연구소 연구교수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關東) 지방에서 일어난 대지진은 참혹하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참혹한 것은 경찰, 군대, 자경단 등이 저질렀던 ‘조선인학살’이었다. 상하이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독립신문』(1923. 12. 5)에 의하면 6,661명의 조선인이 관동대지진으로 무고하게 학살당하였다. 이처럼 학살된 조선인에 대한 조사와 진상규명은 관동대지진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지 100년이 되는 현재까지 학살당한 조선인 수와 진상은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의 방해와 무성의,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무관심 때문이다. 비록 양국의 정부는 ‘남의 일’로 치부하고 있지만, 양국의 시민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

1. 관동대지진 직후 진상 조사와 규명을 위한 노력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의 진상규명을 위한 첫 노력은 대지진 직후였다. 당시 식민지 조선 즉 국내에서는 언론 통제로 인해 조선인이 학살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국외 한인 사회에서는 조선인학살을 규명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중국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일본 정부에 조선인학살에 대한 항의서를 발송하였으며, 기관지 『독립신문』은 진상조사를 위한 특파원을 파견하여 그 결과를 『독립신문』에 공표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상하이 한인사회는 교민 대회를 열고 추도회를 개최하였다. 만주 지역 적기단(赤旗團)은 7,000여 명의 조선인이 참살당하였다고 밝혔으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판의단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선전문과 비격문을 발표하였다. 베이징한교회(北京韓僑會)도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진상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중국 사회에 배포하였다.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진상규명을 위한 첫 노력은 대지진 직후였다. 당시 식민지 조선 즉 국내에서는 언론 통제로 인해 조선인이 학살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

일본 지역에서도 대지진 직후 이재 조선인 구제와 조선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해 ‘재일조선동포피학살진상조사회’를 조직하려고 하였지만, 계엄령하의 일본 정부가 ‘학살’이라는 명칭이 불온

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하지 않아 ‘이재조선동포위문반’을 조직하였다. 이 단체는 『독립신문』 특파원과 함께 피학살 조선인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1923년 12월 28일 도쿄 일화청년회관(日華青年會館)에서 개최한 ‘피살 동포추도회’에서 공개하고 일본 정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였다. 이외에 북성회(北星會) 등 한인단체도 조선인학살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상 규명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대한인교민단을 중심으로 미국 정부에 조선인학살 진상규명을 청원하였다. 유럽에서는 독일의 유덕고려학생회(留德高麗學生會)가 조선인학살의 불법성을 알리는 한편 재독한인대회를 개최하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국외 한인사회의 노력은 일제의 강점 상황에서 큰 성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조선인학살 40주년을 기한 일본 사회의 진상규명 노력

1945년 일제 강점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지만,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진상규명은 여전히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해방 직후 추도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진상규명보다는 규탄에 중점을 두었다. 이후 한동안 잊혔던 조선인학살 진상규명은 관동대지진 40주년인 1963년 일본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해 4월 일조협회(日朝協會)는 조선인희생자조사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5월에는 일조협회 사이타마현련(埼玉縣連)이 중심이 되어 조선인학살조사단을 결성하고 사이타마와 지바(千葉) 지역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연장선으로 6월 전국대회에서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비판, 청산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확정하였다. 7월에는 현

한동안 잊혔던 조선인
학살 진상규명은
관동대지진 40주년인
1963년 일본 사회
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조사를 기초로 위령제실행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관동대지진이 일어난 9월 1일 히비야(日比谷) 공회당에서 조선인 희생자 위령제를, 9월 4일에는 료고쿠(兩國) 공회당에서 가메이도(龜戸) 사건 40주년 추도 집회를 열었다. 이후 진상규명을 위한 목격담, 체험담 수집사업을 이어갔다. 일조협회는 혼조(本庄)와 후나바시(船橋) 외에도 사이타마현의 구마가야(熊谷), 진보하라(神保原), 요리이(寄居), 고마다(児玉), 후카야(深谷), 오케가야(桶川), 도다(戸田) 등지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조선인학살 관련 자료와 목격담 등을 수집하였다. 현장조사는 관동대지진 50주년까지 지속되었다. 이 활동의 결과를 『민족의 가시: 관동대진재와 조선인학살의 기록』¹과 『감추어진 역사: 관동대진재와 사이타마의 조선인학살』²이라는 저작물로 간행하였다. 사이타마현련은 관동대지진 50주년을 맞아 조선인 희생자 조사·추도사업실행위원회 결성을 제안하였고, 각계각층의 찬동으로 결성되었다. 이에 따라 9월 1일 위령제, 9월 3일 추도 기념집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관동대지진 50주년은 진상규명을 위한 일본 시민운동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진상규명 노력이 일조협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50주년에는 단체와 개인의 연대가 이루어

1 日朝協會豊島支部, 1973, 『民族の棘: 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の記憶』.

2 関東大震災50周年朝鮮人犠牲者調査・追悼実行委員会, 1974, 『かくされていた歴史: 関東大震災と埼玉の朝鮮人虐殺事件』.

관동대지진 50주년은
진상규명을 위한
일본 시민운동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진상규명 노력이
일조협회를 중심으로
진개되었다면
50주년에는 단체와
개인의 연대가
이루어졌다.

졌다. 이에 따라 ‘관동대지진 50주년 조선인희생자 추도행사 실행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 실행위원회는 다카하시 신이치(高橋磯一)를 조사위원장으로 하고, 일조협회 도쿄도련(東京都連)이 실행위원회의 사무국 단체로 활동하였다. 이외에도 역사학연구회, 역사과학협의회, 역사교육자협회 등이 참여하였다. 실행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역사의 진실 관동대지진재와 조선인학살』³로 간행하였으며, 추도사업의 일환으로 도쿄 요코야미초(横網町)공원에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를 세웠다.

3. 지바와 도쿄 등지에서 결성된 진상규명을 위한 모임

앞에서 살펴본 진상규명을 위한 일본 시민들의 노력은 사이타마가 중심이었지만, 50주년 이후에는 지바와 도쿄 지역으로 활동 무대가 넓어졌다. 1978년 6월 ‘지바현에서의 관동대지진재와 조선인 희생자 추도·조사 실행위원회’와 1982년 12월 ‘관동대지진 시 학살된 조선인의 유골을 발굴하고 추도하는 모임’이 결성되었다. 이들 단체들은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지바의 실행위원회는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결

3 關東大震災50周年朝鮮人犠牲者追悼實行委員會編, 1975, 『歴史の眞實 關東大震災と朝鮮人虐殺』, 現代史出版會.

성하였고, 도쿄의 추모하는 모임은 재일한인도 회원으로 참여하였으며 한국과도 교류하였다.

지바의 실행위원회는 야마다 쇼지(山田昭次) 등 연구자의 강연회 개최, 체험과 증언을 모은 자료집 간행, 팸플릿 및 슬라이드 제작 등을 통해 지역 보급 활동을 전개하였다. 무엇보다도 지바 실행위원회는 기관지 『이시부미(いしぶみ)』를 현재까지 발행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활동의 결과를 두 권의 『관동대진재와 조선인』⁴이라는 자료집과 『이유 없이 살해당한 사람들-관동대지진과 조선인』⁵으로 출판하였다. 지바 실행위원회는 위의 성과물을 간행한 이후에도 매년 위령제와 유골 발굴 등 꾸준히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관동대지진 60주년을 맞는 1983년에는 살해된 조선인이 묻혔던 현장인 나기노하라(なぎの原)에서 위령제를 가졌으며, 1999년에는 지바 다카즈야마(高津山) 간논지(觀音寺) 경내에 ‘관동대진재 조선인희생자 위령의 비’를 세웠다.

도쿄의 추모하는 모임은 아라카와(荒天)의 역사를 조사하는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단체이다. 이 단체는 학살된 조선인 유골이 아라카와 하천 부지에 묻혀 있다는 증언에 따라 발굴 작업을 위한 준비회를 구성하였다. 발굴작업은 1982년 9월 두 차례 진행되었지만, 유골은 끝내

4 『關東大震災と朝鮮人 第1集: 船橋市とそ周辺ので』(1978), 『關東大震災と朝鮮人 第2集: 習志野騎兵連隊とそ周辺』(1979).

5 千葉縣における關東大震災と朝鮮人犠牲者追悼・調査實行委員會, 1983, 『いわれなく殺された人びと-關東大震災と朝鮮人』, 青木書店.

관동대지진 80주년인
2003년은 조선인
학살의 국가 책임을
묻는 단체가 결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준비회는 이해 12월 추도하는 모임을 결성하였다. 이후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였고, 그 성과를 『바람아, 봉선화의 노래를 전해주렴: 관동대진재·조선인학살부터 70년』⁶으로 간행하였다. 이후에도 진상규명에 노력하는 일본 시민사회는 해마다 조선인학살 관련 지역에서 위령제와 추도회, 강연회, 현장답사 등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관동대지진 80주년인 2003년은 조선인학살의 국가 책임을 묻는 단체가 결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1997년 재일동포 문무선의 인권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일본변호사연합회는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을 조사하였고, 2003년 7월 조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즉 일본 정부에 ‘국가가 조선인학살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과 진상을 조사하여 밝힐 것’을 권고하였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각지에서 추도와 조사에 종사해 온 시민들이 연대하여 지역을 넘어 큰 틀 안에서 모임을 만들려는 분위기가 높아졌다. 그 결과 시민과 연구자 및 관련 단체는 2010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의 국가책임을 묻는 모임’을 결성하고, 국회의원에게 협력 요청, 청원이나 질문 등으로 일본 정부에 호소, 진상규명을 청원하는 서명 제출, 정부에

6 關東大震災に虐殺された朝鮮人の遺骨を發掘し追悼する會編, 1992, 『風よ鳳仙花の歌をはこべ: 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から70年』教育史料出版會.

포커스

대한 질문주의서 제출을 위한 의원 협조 요청 등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00주년을 맞는 현재까지도 국가 책임 질의와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관동대지진 85주년을 맞은 2007년에는 조선인학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일본, 재일한인사회의 시민과 연구자들이 모여 ‘관동대진재 조선인학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한·일·재일 시민의 모임’을 결성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시민단체들도 진상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관동대지진 99주년인 2022년 8월에는 ‘관동대진재 조선인·중국인 학살 100년 희생자추도대회 실행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한 준비회를 조직하여 한중일 연대활동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이외에 관동대지진 당시 가장 많은 조선인이 학살된 가나가와현(神奈川縣)에서도 ‘관동대진재 시 조선인학살 사실을 알고 추모하는 가나가와 실행위원회’를 결성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현장조사, 증언과 체험담 등 자료 수집, 그리고 이를 알리는 강연회와 현장연구, 추도식 등을 이어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군마현(群馬縣)에서도 지역 연구자를 중심으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동대지진 100주년을 1년 앞둔 2022년, 앞서 언급한 시민단체들뿐만 아니라 도쿄 지역에서도 ‘관동대진재시에 학살된 조선인의 유골을 발굴하고 추모하는 모임’, ‘9·1관동대진재 조선인 희생자 추모식전 실행위원회’, ‘1923관동조선인대학살을 기억하는 행동’ 등 시민이 중심인 크고 작은 단체들이 활동한 바 있다.

4. 국내의 시민운동

해방 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을 기억하고자 한



1923한일재일시민연대의 일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현장 추도행사(김중수 제공, 2018)

것은 1946년 9월 2일이었다. 이날 반일운동자구원회와 재일본조선인 연맹 서울위원회 주최로 종로 기독교청년회관에서 추도대회를 가진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추도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을 위한 시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동안 잊혔던 조선인학살에 대한 기억은 1985년 9월 지바의 간논지에 추모의 종과 보화루가 세워지면서 국내에서도 시민 중심의 첫 추도제가 열렸다. 80주년이 되는 2003년 ‘관동대지진 한국인희생자 추모회’가 보화종루를 보수, 정비하고 추모제를 한 이후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 시작되었다.

초기 국내의 진상규명은 아힘나운동본부가 주도하였다. 이 단체는 2006년 일본의 아시아하우스와 함께 일본에서 여름캠프를 개최하였는데, 이때 초청 강사로부터 자경단에 의한 조선인학살 목격담을 듣게 되

포커스



일본 내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서 간행한 책자들

었다. 이를 계기로 아힘나운동본부는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2007년 5월 일본 신주쿠(新宿) 고려박물관에서 열린 조선인학살 진실을 알리는 전시회를 보고, 전시패널을 빌려 9월 3일 국회에서 전시회를 가짐으로써 진상규명의 첫발을 내딛었다. 전시회와 함께 재일조선인학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한일 국제심포지엄도 개최하였다. 이어 11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한·일·재일 시민의 모임’(한국에서는 ‘1923한일재일시민연대’)을 출범시켰다. 이후 국내에서의 진상규명은 1923한일재일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주도적으로 노력하였다.

시민연대는 관동대지진 100주년을 맞는 동안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학술토론회, 학살현장을 찾아가는 스터디투어,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입법화,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도사업, 학살 희생자 유족 찾기 사업, 사진과 자료전시회 등을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관동대지진 90주년을 맞는 2013년에는 한국민간조사단을 구성하여 지바, 사이타마, 도쿄, 요코하마 일대의 학살현장과 추모시설을 조사하였다. 이 조

사단은 시민연대 외에 관동90주년행사준비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인터넷신문 에큐메니안 등이 참여하였다. 또한 9월 1일에는 추도식을 갖고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시민연대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2020년 12월 천안시 병천에 ‘기억과 평화를 위한 1923 역사관’을 건립하고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있으며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시민단체와 연구자로 구성된 ‘1923년 학살당한 재일한인 추도모임’이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사건의 진상규명과 한일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2016년 2월 결성되었으며, 이해 9월 1일 시청에서 자료 전시회를, 광화문광장에서는 추모행사를 가졌다. 95주년인 이듬해 2017년 8월 25일에는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추도식과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박열기념관, 1923 제노사이드연구소, 사단법인 독립, 동학선양사업단 등 시민단체와 연구자 등이 추모행사와 학술행사를 개최하여 조선인학살의 진상을 일반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100주년을 앞둔
2022년 시민연대를
비롯하여 20여
단체가 참여하여
‘간토학살100주기
추도사업추진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100주년을 앞둔 2022년 시민연대를 비롯하여 20여 단체가 참여하여 ‘간토학살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이하 ‘100주기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과 함께 이해 9월 20일 ‘간토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100주기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간토학살 100주기 일본의 국가책임을 묻는 피해소송 준비 좌담회’를 개최, 일본의 국가 책임을 겨냥하였다.

5. 100주년과 이후 남겨진 과제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100주년을 맞고 있지만, 진상규명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일 양국의 시민 및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였다. 100년 전에도, 100년을 맞는 올해도 일본의회에서는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에 대한 국가책임을 묻는 질의를 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때나 지금이나 ‘조사 중’이라는 한결같은 답변을 내놓고 있다.

100주년을 맞는 현실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새로운 환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무엇보다도 일제강점기 이국땅에서 억울하고 처참하게 희생된 분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시민과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해온 역할을 이제는 국가가 받아서 다해야 한다. 당시 임시정부가 항의서를 제출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였듯이, 이제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국가가 보다 전향적인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는 희생된 유족을 찾는 일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포커스

그동안 유족들은 가급적이면 숨기고 싶었던 점도 없지 않았다. 그렇지만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유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유족 발굴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기억과 계승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한일 시민들은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추모비 건립과 추모제, 강연, 현장답사 등을 통해 기억과 계승을 위해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한일 시민의 연대를 통해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노주은, 2008,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학림』 29, 연세대학교 사학연구회.
- 김중수, 2013,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사건을 규명하는 한국에서의 시민운동」, 『관동대지진과 조선인학살』, 동북아역사재단.
- 다나카 마사타카, 2017, 「일본 내 관동대지진 때의 학살사건 진상 규명 운동의 현황」, 『한일민족문제연구』 33, 한일민족문제학회.



성주현(成周鉉, Sung, Ju-hyun)

청암대학교 제일코리안연구소 연구교수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경기대학교·중앙대학교·부천대학 등에서 한국사 관련 강의를 하였으며, 동학·동학농민혁명·민족운동·식민지배정책·관동대지진 등을 주제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평택·수원·안성·안산 등 지역학 관련 연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동학학회 부회장, 1923 제노사이드연구소 부소장, 평택박물관연구소 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관동대지진 조선인 피해, 기억과 추모의 현장을 걸으며

조건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장마가 막 끝난 7월 말, 여름이 한창인 도쿄에서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를 찾았다. 비석도 땀을 흘릴 것 같은 더위, 수풀 속에 안기듯 자리한 추모의 현장이었다. 식민지 ‘조센징’으로 고향을 떠나와 생계를 잇던 중 그야말로 치명적인 재난과 그보다 더 끔찍한 ‘내지인’의 폭력을 당했다. 가공할 만한 지진의 위력에 놀란 가슴이 채 진정되기 전 눈을 붉게 뜨고 ‘조센징’들을 색출하고 다니던 ‘내지인’과 맞닥뜨렸다. 그들은 초췌한 몰골과 어눌한 일본어의 ‘조센징’들을 가차 없이 학살하고 다녔다. 무려 6,000여 명이 넘는 조선인들이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빼앗겼다. 그리고 100년이 흘렀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100년 전 관동대지진 당시 희생된 조선인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도쿄와 지바현 일대에 흩어져 있는 피해 장소와 추도

비 등을 조사했다. 주요 장소는 도쿄 스미다구(墨田區) 요코아미초(横網町) 공원의 도쿄도 위령당(東京都慰靈堂)과 조선인 추도비, 지바현 후나바시시(船橋市)와 야치요시(八千代市), 나라시노시(習志野市) 일대 위령비와 공양탑, 그리고 나라시노수용소 자리 등이었다. 과연 2023년의 일본은 학살당한 ‘조선징’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1. 도쿄 요코아미초공원의 조선인 추도비

도쿄 스미다구 요코아미초공원 내에는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피해자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추도비가 있다. 추도비를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JR 료코쿠역(兩國驛)에 내려 에도도쿄박물관(江戸東京博物館)을 끼고 왼쪽으로 방향을 꺾은 뒤 다이이치(第一)호텔을 지나면 바로 요코아미초공원이 나온다. 추도비는 공원 중심에 있는 건물 오른쪽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요코아미초공원의 주인공은 추도비가 아니라 공원에 들어서자마자 장엄하게 서 있는 도쿄도 위령당이다.

도쿄도 위령당은 1923년 9월 1일 발생한 관동대지진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다. 이후 1944년 말부터 시작된 미군의 도쿄공습 희생자들이 함께 봉안되어 지진과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함께 추모하는 공간이 되었다. 요코아미초공원 내에는 지진과 전쟁 피해와 관련된 전시공간이 또 하나 있다. 도쿄도 부흥기념관이라는 이름의 시설로 지진·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유품과 ‘피해품’, 관련 그림과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다. 다만, 이들 시설 내에는 조선인들을 기억하거나 추모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식민지 조선인들의 피해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서는 공원 한 켠에 따로 자리한 추모비를 찾아야 한다.



도쿄도 위령당(©조건, 2023)

추도비는 1973년 6월 관동대지진 50년을 맞아 결성된 ‘관동대지진 50주기 조선인 희생자 추도실행위원회’에서 건립하였다. 당시 실행위원회는 추도비 건립을 비롯하여 추도행사, 관련 자료 출판 등을 위한 모금 활동을 전개했고, 같은 해 9월 1일 기공식과 추도 집회를 열었다고 한다. 추도비 제막식은 9월 29일에 거행되었다.

비석 앞면에는 ‘추도(追悼)’라는 글자가 검지만, 크고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다. 지면에 가깝게 그 어떤 기교도 없이 사다리꼴 모양으로 조성된 비석에서 엄숙하고 정돈된 추도의 뜻을 읽을 수 있다. 추도비의 왼편에 자그마한 부속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 앞면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보인다.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조건, 2023)

이 사건의 진실을 아는 것은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민족 차별을 없애고 인권을 존중하여 선린우호와 평화의 큰 길을 여는 밑거름이 될 거라 믿습니다.

민족적 차별을 없애는 길은 곧 인권을 존중하고 한일 양국의 우호와 평화를 닦는 것과 한 길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사건의 진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로부터 끈질기게 남아 있는 민족적 차별을 없애는 길은 곧 인권을 존중하고 한일 양국의 우호와 평화를 닦는 것과 한 길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사건의 진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추도비를 세웠던 실행위원회의 진정성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요코야미초공원

에서는 지금도 매년 9월 1일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이 열린다.

2. 지바현 후나바시시의 범계무연탑

지바현은 도쿄 동쪽에 위치해 있다. 서울의 관문이 인천국제공항이라면, 도쿄의 관문은 지바현에 위치한 나리타국제공항이다.

이곳 지바현의 후나바시시와 나라시노시에서도 관동대지진 당시 수많은 조선인들이 학살당했다. 앞서 요코아미초공원 추도비를 건립했던 실행위원회가 1983년 발간한 『이유 없이 살해당한 사람들-관동대지진과 조선인』(いわれなく殺された人びと-關東大震災と朝鮮人, 靑木書店)이라는 책에서 당시 상황을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다.

모토요시 서장에게서 “호쿠소철도 공사에 종사하던 조선인이 … 후나바시로 오는 데, 후나바시에 오면 몰살당해 버릴 것이기에 도중에 군대로부터 인계받아 나라시노 포로수용소로 데리고 가도록”이라는 명령을 받았다. 아마누마 근처까지 가니 손을 포박당한 조선인 약 50명 정도가 기병이 앞뒤로 딸린 채 열을 지어 왔다. …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넘겨주게!”라고 부탁하였다. 그러자 기병대는 “후나바시 자경단에 넘겨주라는 명령을 받고 왔기 때문에 안 돼”라며 들어주지 않았다. …

바로 그때, 후나바시역 부근에서 열차를 세워 검색하고 있던 자경단이란 피난민 집단이 이들을 발견했다. 경중을 난타하며 약 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손에 죽창이나 쇠갈고리 등을 들고 몰려들어 왔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선인들의) 보호를 부탁하고 군중을 헤쳐나가며 후나바시경찰서로 튀어 돌아왔다. … 서에 도착하여 모토요시 서장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니 서장은 “경찰의 힘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어. 되돌아가 상황을 충분히 조사해 와 주게”라고 명령하였다. 내가 바로 되돌아가는 도

중에 “만세! 만세!”하는 소리가 들려 이젠 틀렸다고 생각했다. 현장에 가 보니 지옥 상태였다.¹

위 글의 화자인 ‘나’는 당시 후나바시경찰서의 경찰관 와타나베 요시오(渡邊良雄)였다. 와타나베의 증언에는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첫째, 일 본인 자경단들이 조선인들을 무분별하게 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조선인들은 철도 노동자로 신분이 확인되어 있었으며, 이미 ‘포박당한’ 상태였으니 저항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현지 일본인들로 구성된 자경단은 죽창과 쇠갈고리를 사용해 조선인 노동자들을 학살했다. 와타나베는 그 상황을 ‘지옥 상태’였다고 기억했다. 둘째, 일본 관헌 측이 이미 조선인들에 대한 학살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후나바시 경찰서장은 와타나베에게 조선인들이 “후나바시에 오면 몰살당해 버릴 것”이라고 말하며 이들의 보호를 명령했다. 셋째, 일본군이 자경단에 의한 조선인 학살을 묵인·방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와타나베가 조선인들을 인솔하고 후나바시까지 온 기병대에게 인계를 요구했으나 기병대는 “후나바시 자경단에 넘겨주라는 명령을 받고” 왔다는 말을 하며 들어주지 않았다. 당시 일본 정부는 관동지역에 계엄령을 선포

1 다나카 마사타카, 「간토대지진과 지바에서의 조선인 학살의 추이」,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7, 91쪽 재인용.

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치안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군은 무방비 상태에 놓인 조선인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죽음의 구렁텅이에 밀어 넣고 있었다. 와타나베의 증언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일본군은 학살을 묵인·방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자행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와타나베가 목격한 조선인 학살은 지바현 곳곳에서 수없이 발생했다. 지진 피해가 크지 않았던 지바현에서 조선인 학살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일본 정부가 지진 피해를 입은 조선인과 중국인들을 나라시노에 설치한 수용소로 이송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송의 이유는 ‘보호’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자경단들을 나라시노로 불러 모으는 역할을 했다. 와타나베의 증언에는 이러한 정황이 잘 나타나 있다.

지진 피해가 크지 않았던 지바현에서 조선인 학살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일본 정부가 지진 피해를 입은 조선인과 중국인들을 나라시노에 설치한 수용소로 이송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역사를 배경으로 지바현에는 조선인 희생자들을 기리는 위령비와 공양탑이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다. 이 중 가장 이른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후나바시시 마고메영원(馬込靈園) 내 ‘법계무연탑(法界無緣塔)’이 있다.

법계무연탑은 1924년 9월 1일, 즉 지진 발생 1년 후에 건립되었다. 후나바시 불교연합회에서 조선인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세웠다고 한다. 그



마고메영원에 있는 법계무연탑(©조건, 2023)

러나 탑을 세울 당시 불교연합회 측은 지진 발생 당시 떠돌았던 소문이 거짓이었다고 부정하지는 못했다. 조선인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달래고자 했지만 학살사건이 발생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던 지역사회의 상황을 고려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 점에서 법계무연탑은 패전 이후 세워진 다른 위령비들과 조금 성격이 다르다.

요컨대 법계무연탑의 탑신에는 조선인 학살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학살에 가담했던 주민들의 입장을 살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일본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에서는 이러한 법계무연탑 건립의 사연을 “당시의 매서운 정세와 양심의 갈등을 엿볼 수 있다”고 해설했다.

3. 조선인 수용소가 있던 자리, 그리고 잊혀진 학살의 흔적

100년 전 나라시노 일대에는 일본군 기병 제1여단이 주둔하고 있었다. 기병 제1여단 예하에는 기병 제13연대와 제14연대가 편제되어 있었는데, 후나바시와 나라시노에 걸쳐 있는 도호대학(東邦大學) 나라시노캠퍼스 일대에 아직도 각 부대 발상지를 표시하는 비석이 남아 있다. 이 때문에 나라시노는 ‘기병의 도시’라고 불렸다. 지금도 후나바시시와 야치요시(八千代市) 경계에는 거대한 일본 자위대 연습장이 있다. 공식명칭은 나라시노 육상자위대연습장이다.

도호대학 나라시노캠퍼스에서 오른쪽으로 1km쯤 떨어진 곳에는 히가시나라시노산초메(東習志野三丁目) 아동유원(兒童遊園)이 있다. 이곳에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포로로 잡힌 독일군들이 수용되었던 자리라는 설명을 볼 수 있는데, 관동대지진 당시 수많은 조선인과 중국인들이 수용되었던 곳도 바로 여기였다.

일본 정부가 나라시노에 조선인과 중국인 수용시설을 만든 것은 지진 발생 5일 뒤인 9월 5일이었다. 그날 도쿄 나가타초의 수상 관저에서 열린 임시 내각 회의 중 계엄구역을 지바현과 사이타마현으로 확대하는 한편, 조선인들을 “한데 모아 보호 수용”하는 방침이 결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도쿄에 있는 조선인 1만 5,000명을 나라시노 병사(兵舎)에 수용하고 100명당 1명씩 경관을 붙여 호위할 것”이라는 내용이였다.

그러나 나라시노수용소 이동과정에서 오히려 군대가 자경단에게 조선인들을 넘겨 학살을 방조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수용소 수용 이후에도 이른바 ‘불령선인’을 선별하여 직접 살해하는 일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수용 중인 “조선인들을 주겠으니 받으러 오라고” 연

락하여 결국 죽도록 했던 사례도 확인되었다.

7일 오후 4시경, 병영에서 조선인을 주겠으니 받으러 오라는 통지가 왔다고 급히 집합이 있어, … 밤중에 조선인 15명을 받아 각 구에 배당해 … 공동으로 3명 인 수, 절 마당에 앉혀 놓고 망을 서다.

8일 또 선인을 받으러 가다. 9시경에 이르러 2명 받아 오다. 도합 5명 … 구멍을 파고 앉혀 목을 자르기로 결정 … 구멍 안에 넣고 묻어 처리하다.²

일본군이 마을 주민들에게 조선인들을 보내서 죽게 만든 것은 “군대가 자기들이 저지른 사건의 ‘연대책임’을 주민들에게 지우려 했던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일본 정부와 군대가 학살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자행한 일이었던 것이다. 단, 그러한 조치가 누구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는지, 그렇게 판단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조선인 학살의 원인과 실태, 특히 일본 정부와 군대의 학살 개입 과정 및 정도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 학계에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나라시노시의 조선인이 수용되었던 자리에는 현재 아이들의 놀이터가 들어서 있다. 나라시노 독일포로수용소 포로들로 구성됐던 오케스트라

2 다나카 마사타카, 「간토대지진과 지바에서의 조선인 학살의 추이」,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7, 97쪽 재인용.



나라시노수용소 터(©조건, 2023)

에 관한 비석이 이곳을 역사 유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전부다. 독일 포로들은 나라시노에서 비교적 안온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선전되고 있다. 이에 반해 100년 전 여기에 조선인들이 수용되어 있었고 이곳에 주둔했던 군인들과 마을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조선인들을 살해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일까 고민되는 현장이었다.

4. 조선인 학살, 그리고 추모하는 사람들

1923년 9월 6일 관동지역 계엄군은 일본 민중들에게 조선인 학살을 멈

추라는 전단을 살포했다. 이를 계기로 자경단의 활동은 점차 축소되었고 무분별하고 조직적인 조선인 학살 역시 조금씩 줄어들었다. 애당초 일본 정부가 지진 발생 즉시 학살 행위를 막고자 했다면 수천 명이 살해당하는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조선인 학살은 일본 정부와 군대의 명백한 '의도' 하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인들은 정부의 방치와 방조 아래 자신들의 공포와 불안, 불만을 식민지 조선인에게 극단적으로 배출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자신의 과오를 인식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법계무연답은 그 대표적 예다. 비록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은 아직 없지만 일본 시민들에 의한 조선인 피해자 추모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적지 않은 일본인들이 100년 전 조선인 학살의 과오를 인정하고 매년 9월 1일 조선인 위령비 앞에 선다.

도쿄 스미다구(墨田區) 야히로(八廣)에 있는 '관동대진재 시 한국·조선인 순난자 추도지비'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각인되어 있다.

일본인들은 정부의 방치와 방조 아래 자신들의 공포와 불안, 불만을 식민지 조선인에게 극단적으로 배출했다.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일본군 군대, 경찰, 유언비어를 믿은 민중에 의하여 수많은 한국·조선인들이 살

체험! 역사현장

해당하였다. 도쿄 번화가 일대에서도 식민지인 고향을 떠나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채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다.

이 역사를 가슴에 새기고 희생자를 추모하여 인권 회복과 두 민족의 화해를 바라며 이 비를 건립한다.

추도비의 내용처럼 더 많은 일본인이 추도비 내용에 공감하고, 더 많은 한국인이 그 진정성을 이해할 때, 비로소 “두 민족의 화해”는 가능할 것이라 믿는다.



조건(曹健 Cho, Geon)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동국대학교에서 한국근현대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위원회 전문위원,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등을 지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강제동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인천육군조병창 등 일제의 한반도 병참기지화 정책과 강제동원 관련 유적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관동대지진 100년, 행정 당국에 의한 ‘역사 봉인’을 둘러싼 공방

호리야마 아키코(堀山明子)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외신부 기자

1923년 9월에 발생한 관동대지진이 100년을 맞이한다. 지진 이후에 조선인과 중국인, 일본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학살당한 사건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도쿄도(東京都),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 당국은 전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새로 실시 하였으나, 추도하려는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추도논쟁 오히려 과거에 열람을 허용하였던 도쿄도 보관 자료의 일부를 지금은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연구자의 증언도 있다. 지진 이후에 왜 학살이 일어났는지 그 경위를 알아보는 작업은 역풍을 맞고 있다.

한편, 민간 시민단체에 의한 학살현장 주변의 청취 조사와 기억 계승, 추도 사업은 계속되고 있으나 당시를 직접 겪은 증언자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다. 지금까지 수집한 증언을 앞으로 어떻게 다음 세대로 계승할지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다.

학살사건 발생 이후 10년마다 시민단체와 연구자들이 추도집과 증언 집을 출간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 글에서는 90년(2013년) 이후의 동향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지난 10년 동안 직면한 과제와 현황을 보고하고자 한다.

1. 후원해 왔던 행정 당국의 비협조 확산

1973년에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가 설치된 도쿄도 스미다구(墨田區)의 공원에서 매년 시행되던 추도식은 2017년을 기점으로 모습이 크게 바뀌었다.

추도식에는 1974년부터 도쿄도 지사가 추도문을 보냈으나 보수 성향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지사는 취임 2년 차인 2017년부터 이를 중단하였다. 같은 해, 스미다구 구청장도 2002년부터 계속해 온 추도문 발송을 중단하였다. 각각의 중단 이유는 추도비에 새겨진 사망자 수 ‘6,000여명’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수단체로부터 항의를 받아 ‘희생자 수는 여러 설이 있다’라는 입장에서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한다.

한편, 2017년부터는 보수 성향 단체 ‘소요카제(そよ風)’가 추도식 바로 옆에서 추도 항의 집회를 열고 ‘불령선인’(일제강점기에 사용된 용어로, 불온하고 불량한 조선 사람을 뜻한다) 등의 차별적 용어를 사용하며 마이크를 통해 학살부정론을 외쳤다. 도쿄도는 이 단체에 대해 2019년 9월 1일에 연 집회에서의 언동이 도쿄도 인권조례에 근거한 ‘헤이트 스피치’라고 인정하고 동영상 등의 삭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소요카제는 그 이후에도 매년 추도식 바로 옆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소요카제의 주요 활동은 군마현 현립 ‘군마의 숲’ 공원에 설치된 ‘조선인 강제연행 희생자 추도비’ 철거를 요구하는 운동이다.

소요카제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일반적으로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단체이다. 이 단체 홈페이지(soyokaze2009.com)에 따르면 10대부터 80대까지의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성도 소요카제 지원대로서 준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2023년 7월 19일 현재, 여성 회원은 577명, 남성지원 회원은 314명이다. 이 회원 수의 약 절반이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 주민이다.

블로그에 게재된 활동 보고에 따르면 소요카제의 주요 활동은 군마현(群馬縣) 현립 ‘군마의 숲’ 공원에 설치된 ‘조선인 강제연행 희생자 추도비’ 철거를 요구하는 운동이다. 회원 교류 행사로 올해 7월 13일에는 전몰자를 위령하는 ‘야스쿠니(靖國)신사 미타마 마쓰리(みたままつり)’¹에 참가하여 자신들이 기증한 소요카제 단체 이름이 새겨진 등롱(燈籠) 앞에서 남녀 수십 명이 기념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을 블로그에 올렸다. 사진을 보면 소요카제의 등롱은 역사수정주의적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회의(日本會議)’나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會)’의 등롱이 나란히 늘어선 쪽에 장식된 것으로 보아 이러한 단체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전쟁 희생자의 원혼을 위로하자는 취지의 행사로, 194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7월 13~16일에 열린다.

조선인 희생자 추도행사에서 행정 당국이 철수하려는 움직임은 도쿄도와 스미다구뿐만이 아니다. 한반도와 일본 시민 교류를 계속해 온 비영리 단체 고려박물관(일본 신오쿠보 소재) 관계자는 올해 7월 17일 관동대지진 학살에 대해서 교육하는 사업의 후원을 신청하였는데, 신주쿠구(新宿區) 다문화공생추진과로부터 ‘구의 시책 방향성과 다르므로 후원할 수 없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2001년 개관 이후, 조선인 희생자를 추도하는 행사의 후원을 신청해 왔지만, 거부당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통지서에는 행사의 어떤 부분이 신주쿠구 시책과 다른지에 대해 명기되어 있지 않다. 행사 이름에 ‘학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다는 점에서 논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취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신주쿠구는 코리아타운이 있는 신오쿠보(新大久保)를 포함하는 행정구역으로, 도쿄도 안에서도 다문화 교류사업에 비교적 적극적인 자치단체였기 때문에 고려박물관 관계자는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2. 공식적인 사실 인정을 회피하고 자료 열람 범위는 축소

대지진 이후에 학살된 희생자 수에 대해서는 당시부터 정확한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연구자가 당시의 수사 자료와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모아 간토(關東) 주변 실태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행정 당국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2008년 내각부에 사무국을 둔 각료와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방재회의가 발표한 ‘재해교훈 계승에 관한 전문조사회 보고서’의 『1923 관동대지진 보고서(제2편)』² 4장 2절에 ‘살상사건 검증’이 있다. 그러나 이 분석은 정부와 행

정기관에서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다.

보고서에 따르면 헛소문에 근거한 살상사건의 희생자 수는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의 1~수 퍼센트에 해당하며, 인적 손실의 원인으로 경시할 수 없다”라고 적혀 있다.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체적으로 약 10만 5,000명이라고 추계되므로 천에서 수천 명이 된다.

일본 언론도 이 보고서 이후 조선인 학살 사망자 수를 ‘수천 명으로 보인다’라고 쓰는 경우가 늘어났다. 학살 사망자 수가 ‘6,000여 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선동포위문반 등 복수의 조사를 연구자가 정리한 정설로 부정할 의도는 없다. 그러나 역사수정주의자는 사망자 수를 쟁점으로 삼아 날조라고 비판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방재회가 작성한 보고서의 추계는 비교적 인용하기 쉬울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 행정 당국의 조사에 기초한 최저 사망자 수는 지진 직후 사법성에서 조사한 결과인 약 230명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았다. 중앙방재회의 보고서에서는 학살된 희생자 수는 당국에서도 적어도 천여 명에 육박한다고 보면서 추계이긴 하나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다. 1923년 조선총독부 기록을 바탕으로 내무성이 조선인 피살 인원을 약 248명이라고 파악했다.

2 www.bousai.go.jp/kyoiku/kyokun/kyoukun/nokeishou/rep/1923_kanto_daishinsai_2/.

당시 조선총독부 도쿄 출장원은 이를 전제로 은밀히 조사를 했는데 간토 주변과 나가노현의 정보를 합해서 합계 약 813명이라고 보고했다. 중앙방재회 보고서에는 이 자료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조선인 희생자의 시신은 숨겼다는 증언도 있고 『독립신문』(1923년 12월 5일 자)의 ‘1만 명 희생자’라는 보도도 있기 때문에 상한은 수천 명이라고 추계했다고 생각한다.

중앙방재회의 보고서 내용을 일본 정부가 사실로 인정하는가를 묻는 질문주의서는 여러 건 제출되었으나, 각의 결정된 정부 견해는 “유식자가 집필한 것이므로 그 기술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부가 답변하는 것은 곤란하다”(2017년 4월 19일 자 답변)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관동대지진의 교훈을 활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심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피하였다.

보고서의 살상사건 검증 부분은 스즈키 준(鈴木淳)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 연구과 교수가 집필하였다. 국가기관인 일본학술회의는 올해 7월 8일, ‘관동대지진 100년과 방재감재과학(關東大震災100年と防災減災科學)’이라는 제목의 심포지엄³을 열었다. 20명 이상의 보고자 가운데 스즈키 교수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헛소문에 의한 살상사건을 주제로 한 발표는 없었다. 62개 학·협회 구

3 janet-dr.com/060_event/20230708.html.

성원이 참가했다는 논문집을 보더라도 헛소문에 따른 학살을 역사적으로 다룬 논문은 없다. 행정 당국이 자료 검증과 조사에 소극적이라서 학술적으로 ‘새로운 발견’이 어려운 가운데 학회의 관심은 약화된 것처럼 보인다. 또, 일본학술회의 회원은 총리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스가(菅) 정권 시대인 2016년부터 정부 방침과 다른 견해를 가진 학자가 임명을 거부당하는 사건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조선인 학살에 대한 정부 견해를 묻는 질문주의서가 제출되었는데, “정부 내에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라는 답변만 반복하였다. 스키 교수 검증한 자료를 포함하여 국회도서관과 방위연구소에 관련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초가 되는 자료를 각 기관에서 모아서 조사하려는 의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행정 당국이
자료 검증과 조사에
소극적이라서
학술적으로
‘새로운 발견’이
어려운 가운데 학회의
관심은 약화된 것처럼
보인다.

올해 대면 국회 질의에서는 참의원 내각위원회(5월 23일)와 법무위원회(6월 15일)에서 학살에 관한 자료의 정밀조사나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질문이 있었지만, 질문주의서 답변을 뛰어넘는 답변은 없었다. 내각위원회에서는 질문한 의원이 “국회도서관에 기록이 있다”며 자료를 배부했는

데도 경찰청 관방장관은 “설령 지적인 자료를 확인하더라도 그 내용을 평가하는 일은 어렵다”며 과거의 조사 내용에는 답변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치안 당국 수장인 다니 고이치(谷公一) 국가공안위원장은 “추가 조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부인하였다.

조선인 학살에 관한 자료 확인에 응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부작위는 ‘학살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역사수정주의자에게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다. 소요카제는 7월 10일 블로그에 정부가 학살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은 없다’라고 답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태도가 100년 동안 일관되어 왔다는 사실은 바꿀 수 없다. 역사로부터 배워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소요카제의 대응은 희생자 수의 전체적인 파악이나 ‘시신이 없다면 왜 그런가’ 하는 역사 검증의 논의는 전혀 따르지 않고 ‘기록이 없다’라는 근거에 의문을 던지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 학살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 측에 떠넘기는 방식이다. ‘조선인 학살 문제는 검증이 불충분한 문제 안건’이라는 인상을 일본 사회에 심어놓으면 ‘학살은 없었다’라는 입증을 하지 않더라도 추도사업 확대를 막을 수 있다.

조선인 학살에 관한
자료 확인에 응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부작위는 ‘학살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역사수정주의자에게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 전술을 돕기라도 하듯이 도쿄도는 과거에 공개하였던 자료도 보여주지 않게 되었다. 비교적 새롭게 확인된 자료로 연구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도쿄도 위령당에 소장된 4만여 명의 사망자 조사표다. 도쿄도 사망자는 약 7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으로 피난한 사람 이외의 조사표는 남아 있었다. 가나가와(神奈川)대학 연구팀이 2006년, 관동대지진 관련 사진자료를 열람하였을 때, 사망조사표에 본적지와 함께 사망 장소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망했는지 불명확하다고 명기되어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도쿄도는 기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 학살 실태 해명으로 이어지는 자료를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학살을 부추긴 경찰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지 않도록 ‘역사를 봉인’하고 있다.

당시 연구팀에 참가하였던 기타하라 이토코(北原糸子) 리쓰메이칸대학(立命館大學) 객원교수는 6월 7일, 일본 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시 일부밖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차례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혐오 소란이 있으므로”라며 열람을 거부당했다고 말하였다. 도쿄도는 기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 학살 실태 해명으로 이어지는 자료를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학살을 부추긴 경찰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지 않도록 ‘역사를 봉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 '민중 폭력'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내적 접근

조선인 학살에 관한 청취조사는 대지진 70주년, 80주년, 90주년으로 확대되어 그때마다 그 전후로 관련 책 출간이 많이 이루어졌다. 90주년 기념행사 실행위원회가 2014년에 출간한 『관동대지진 기억의 계승(關東大震災の記憶の継承)』(日本經濟評論社)의 '후기'에서 다나카 마사타카(田中正敬) 센슈대학(專修大學) 교수는 70주년부터 20년간 주요 가맹단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70주년 때 직접 체험을 증언해 주었던 사람들이 80주년 이후에는 고령화 때문에 증언이 어려워져서 영상기록과 수기를 통한 공부 모임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한다. 90주년에는 “이 책의 제목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승하는가가 현재 요구되고 있다”라고 기술하였다.

100주년 때도 기억의 계승은 계속되는 과제이지만, 행정 당국이 조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역사적 검증 논의에도 나서지 않는 상황이므로, 일반 시민의 관심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새로운 움직임도 있다. 소문을 믿고 민중이 폭력적으로 치우쳤던 100년 전의 상황이 인터넷에 허위 정보와 차별적 발언이 넘쳐나는 현재와 본질적으로 비슷하지 않나며 현재의 혐오범죄와 관련지어 논의하는 접근방식이다. 100년 전의 교훈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무지하게 있으면 피해자가 될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내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출간물로는 작가 가토 나오키(加藤直樹)가 2014년에 출간한 『9월, 도쿄의 거리에서 1923년 관동대지진 제노사이드의 잔향(九月, 東京の路上で1923年關東大震災ジェノサイドの残響)』(ころから)이 논의의 계기가 되었다.

“문제의 본질은 소문보다 차별의식입니다. 현대의 학살부정론도 ‘조선인 폭동’이라는 허위를 강변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자경단과 같은 차별논리입니다.”

가토는 대지진 100주년 기획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과의 인터뷰(2023년 4월 9일 자)에서 “문제의 본질은 소문보다 차별의식입니다. 현대의 학살부정론도 ‘조선인 폭동’이라는 허위를 강변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자경단과 같은 차별논리입니다”라며 관동대지진 학살사건을 다시 배우는 오늘날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학술적 영역에서는 후지노 유코(藤野裕子)와 세다대학(早稲田大學) 교수가 2020년에 출간한 『민중 폭력-봉기·폭동·학살의 일본 근대(民衆暴力-一揆・暴動・虐殺の日本近代)』(中公新書)가 있다. 관동대지진 학살사건도 사례연구에 포함되어 있다. 이 책에서 후지노는 민중 폭력은 계급사회 내부의 모순과 차별이 배경이며 불만의 분출구가 권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권력에 대항하는 민중’과 ‘피차별자를 박해하는 민중’이 다른 것처럼 인식하는 사고에 이의를 제기하며 “권력에 반발하는 의식과 다른 민족 등을 차별하는 의식은 한 개인과 사회집단 속에 모순 없이 존재하며, 일단 시작된 폭력을 계기로 양쪽이 모두 나타나는 일이 가능하다”라며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영화계로도 이어져 올해

9월에 상영되는 <후쿠다 마을 사건(福田村事件)>이 주목받고 있다. 이 영화는 시민들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제작비를 모았으며, 실제 사건을 토대로 한 영화이다.

후쿠다 마을은 현재 지바현(千葉縣) 노다시(野田市) 안에 있다. 관동대지진 이후인 9월 6일, 가가와현(香川縣)에서는 후쿠다 마을 관리자가 15명의 행상 일행에게 ‘조선인이 아니냐’고 트집을 잡았다. 행상 일행은 후쿠다 마을 관계자에게 일본인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신부를 포함한 9명이 살해되었다. 이 사건은 작가 쓰지노 야요이(辻野彌生)가 2013년에 『후쿠다 사건-관동대지진·알려지지 않은 비극(福田村事件-關東大震災·知られざる悲劇)』(崙書房出版)으로 출간하였다.

사실 행상 일행은 가가와현에서 온 사회적으로 차별받았던 부락 출신이었다. 가가와 인권연구소는 홈페이지에서 후쿠다 마을 사건에 대해 피차별 부락에 대한 차별, 행상이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 조선인 차별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라고 지적한다.

영화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는 행상이 ‘조선인이면 죽여도 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있다. 이 대목은 쓰지노의 원작에 없는 대사다. 영화를 제작한 모리 다쓰야(森達也) 감독은 제작비 모금 활동을 하던 중에 8bitnews와의 인터뷰(2022년 6월 7일 동영상 배포)에서 “일본인 인데도 살해당하였다는 묘사를 하면 조선인이면 죽여도 되느냐는 말이 된다.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라고 말하였다. 또 “가해자는 흥포하고 나는 다르다”라는 형태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 짓는 것보다 “선량한 시민이 가해자가 되는” 구조를 지켜보면서 내 안의 차별의식을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개봉을 앞두고 <후쿠다 마을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스즈키 유(鈴木有) 노다(野田) 시장은 6월 20일 시의회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삼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싶다”라며 조의를 표하였다. 사건 이후 시가 피해자에게 조의를 표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금기시되어 온 100년 전 사건이라도 현재에 그 교훈을 되살린다는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진다면 ‘바람 구멍’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호리야마 아키코(堀山明子, Horiyama, Akiko)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외신부 기자

1989년 대학생 시절 교환학생으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한국어 성사를 연구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1991년 마이니치신문에 입사한 후 정치부, 외신부 등을 거쳐 주로 외교·정치, 문화교류 분야를 중심으로 보도해 왔다. 북일 교섭을 취재하기 위해서 평양을 세 번 방문했으며, 2004~2009년 서울특파원, 2011~2015년 미국 LA특파원으로 한국 사회와 해외의 한인 사회를 취재했다. 2018년 4월 다시 서울지국장으로 부임했다가 2021년에 귀국했다. 현재는 주로 칼럼을 집필 중이다.

Message from the Editor-in-Chief Kim, Hyun-chul

Guest Essays

The Great Kanto Earthquake Massacre of Koreans and the Role of the Korean Government

Kim, Gwang-yol

The Japanese Government's Responsibility and Status for the Korean Massacre During the Great Kanto Earthquake

Tanaka, Masataka

Focus

100 Years After the Great Kanto Earthquake: The History of Cover-Ups Related to Korean Massacre and the Efforts of Fact-Finding Investigations

Research Status and Tasks Related to the Great Kanto Earthquake Massacre of Koreans

Chang, Se-yun

Rumors and the Cover-Ups of the Korean Massacre Under the Japanese Martial Law and Evasion of Responsibility

Seo, Chong-chin

Two Massacres of Koreans Before and After the Great Kanto Earthquake in the 1920s: Colonialism and the Predicted Tragedy

Bae, Young-mi

Memories and the Narratives of 'Responsibility' for the Korean Massacre During the Great Kanto Earthquake in Postwar Japan

Hwang, Ik-koo

Efforts and Tasks of Korean and Japanese Citizens to Undercover the Truth About the Korean Massacre During the Great Kanto Earthquake

Sung, Ju-hyun

Experience Historical Sites

The Sites of Korean Victimization During the Great Kanto Earthquake: Remembrance and Commemoration

Cho, Geon

Field Reports

100 Years After the Great Kanto Earthquake: The Debates on the 'Suppression of History' by Administrative Authorities

Horiyama, Akiko